

#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체계 개선 방안

임 성 복

## 연구진

연구책임

- 임성복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서 문

최근 대전지역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R&D형의 첨단벤처기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지역내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나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제조업의 건실한 성장은 그 자체적으로도 생산,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 분야 특히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지역의 상당수 제조업은 최근 10년 미만의 짧은 업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어 초기단계와 최종 성숙단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아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 중간 성장단계의 첨단기업들은 산업자금 확보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타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역은행이 부재함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자금공급 측면에서 한층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지역금융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내 산업금융이 안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적으로 지역산업금융을 체계화 하고, 향후 이른바 지역금융에 있어서의 혁신주체들의 협력과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제수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지역내에서 산업금융 일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다양한 논의들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더 정교한 방식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쓴 연구자와 자료에 협조해 주신 지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병 로**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요약

### 제2장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

#### 제1절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 혁신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특성

###### ① 창업초기자금(early-stage financing)

- 창업초기 자금은 신기술과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시험단계에 필요한 자금, 개발된 상품의 생산 및 시장개척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서 종자자금(seed money),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과 시장개척자금(first-stage financing)으로 구분

###### ② 기업확장자금(expansion financing)

- 기업확장자금은 초기확장자금(second-stage financing), 메자닌단계 자금(mezzanin financing), 연결지원자금(bridge financing), 기업매수 및 인수자금(acquisition, MLB financing)으로 구분

###### □ 은행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 ① 신용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

###### ②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대출위험 분산 수단 확충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 ③ 혁신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 활성화
- ④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육성
- ⑤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적 기능 강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와 은행 간 역할을 분담. 공적보증과 은행 관계형 대출 간에 보완적 기능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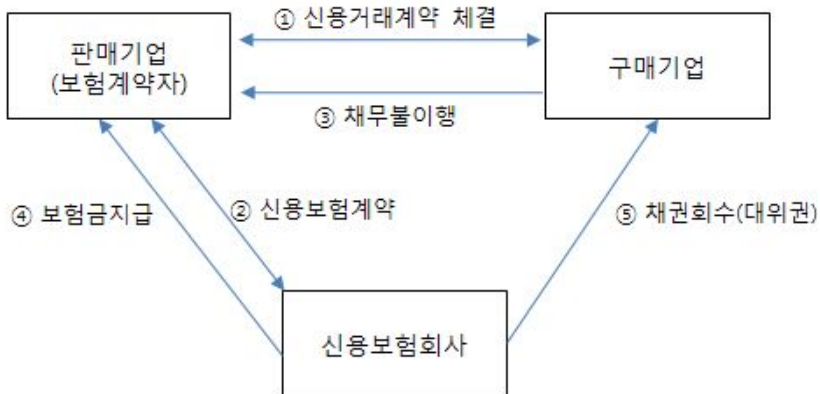
**제2절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해외사례**

**1. 일 본**

- 1) 기업펀드(기금)
- 2) 금융세이프티넷보증
  -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신용보증협회에서 운용하는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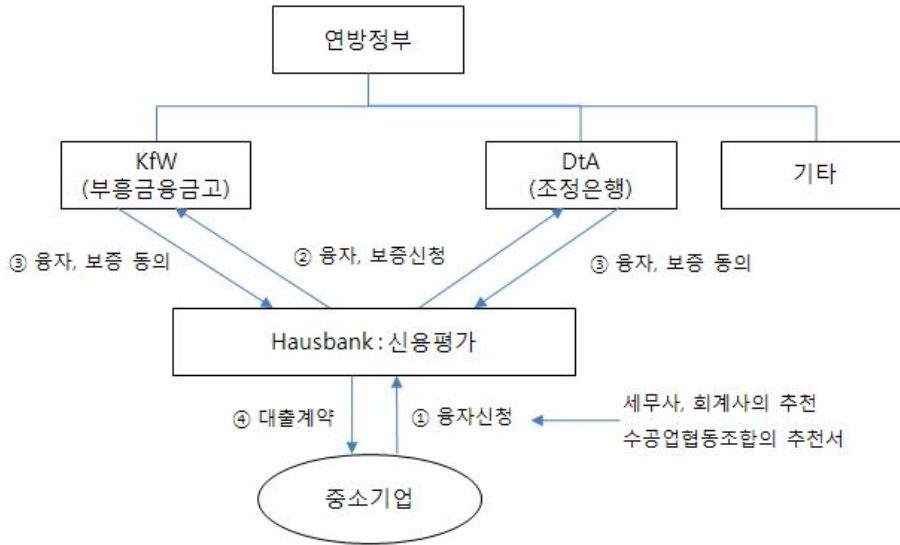
**2. 유 럽**

- 1) 신용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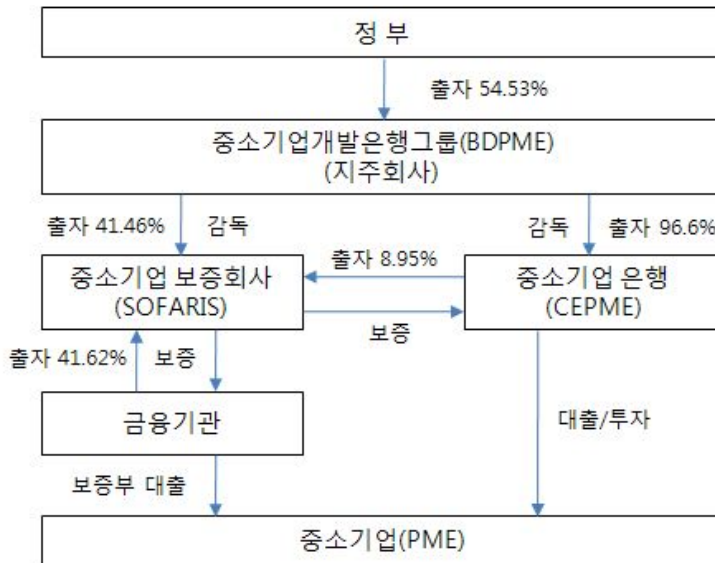
[그림] 신용보험체계

2) 독일의 주거은행제도



[그림] 독일 연방정부 중심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스템

3) 프랑스의 보증·대출 원스톱지원체계



[그림] 프랑스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 구조

### 3. 외국 산업금융지원제도의 시사점

<표>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비교

구 분	주 요 내 용
미 국	· 중소기업자가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용자보증제도가 중심
일 본	· 정부계 중소기업금융 3기관(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 공고, 상공조합중앙공고)에 의한 투자 고도화 용자(중소기업사업단) ·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중소기업의 신용력·담보력 보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소기업 체질강화 자금조성
독 일	· 유럽부흥계획(ERP)특별기금에 의한 조성책이 중심 · 부흥금융공고(KfW)등의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 · 신용보증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단위에서 실시되나 통상, 업종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수행

### 제3장 지역 산업금융 현황과 실태

#### □ 금융기관의 대도시 산업자금 여신 비교

- 2009년 2/4분기까지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일반대출 규모는 7,729십억원으로 부산(31,327십억원), 대구(21,301십억원), 광주(11,319십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수준
- 예금은행 예대율 역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대도시의 경우 최근 3-5년 기간 동안 예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8년 대전지역 예대율 85.4%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

□ 산업금융 실태

《 한국은행 조사 분석 내용 》

- 1)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저하
- 2) 자금조달 경로
  -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등 전통적인 벤처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데다 벤처기업의 미성숙 등으로 기업공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데 주로 기인 : 은행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이 가장 높음
- 3) 정책자금 조달 방식

<표>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평균 금리 비교

(%, %p)

은행대출(신용, A)	정책자금(B)	A - B
6.8	4.7	2.1

주 : 1) 조달금액 가중평균 금리  
2)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9.2월) 결과

<표>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업력별 정책자금 이용 비중

(%)

3년 이하	3~7년	7년 초과	(10년 초과)	계
			48.8	
7.3	16.2	76.5	48.8	100.0

주 : 1)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9.2월) 결과

<표> 벤처캐피탈의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

(%)

3년 이하	3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10년 초과)	계
			25.8	
41.6	14.2	44.2	25.8	100.0

주 : 1)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은행, 2009.2월)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 :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1) 금융기관 이용현황 및 대출형태

①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44.3%로 가장 높았고, “신용보증서 대출” 26.7% 순임

② 차입자금 비중

-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1.5%, “정책자금” 21.8%, “비은행(제2금융권)금융기관” 3.9%등의 순으로 조사

③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

- “원부자재 구입” 41.7%, “설비투자” 28.6%, “인건비 지급” 16.8% 등의 순임

④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 29.5%가 “높은 대출금리”, “신용보증서 위주대출”(14.9%),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2.4%)인 것으로 조사

⑤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 “금리인하”(43.1%), 신용대출 확대(17.7%), 신용보증 지원(17.4%), 설비 자금지원(11.3%)등의 순으로 지적

□ 대전지역의 산업지원자금 운용실태

▷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 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 ②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 ③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④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 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

▷ 산업지원자금의 내용과 실태

<표> 기관별 자금 용자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	중소기업청 (8)	중소·벤처 창업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기금
		경영혁신 자금
		구조조정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기타 (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대전시 (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 성장단계별 산업자금 지원 내용

-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구 분	성장단계				합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제한없음	
중기청	13	7	6	70	96
기 타	1	0	3	65	69
중기센터	3	0	0	17	20
특구본부	2	0	0	13	15
테크노파크	0	1	0	13	14
합계	19	8	9	178	214

제4절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 운용 현황

1. 부문별 지원현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28.4%(1,046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지원기업 14.8%(546억원), 신용대출자금 지원기업 13.0%(479억원), 창업중소기업 11.9%(439억원),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기여 기업 10.7%(394억원) 등의 순임

2. 업종별 지원현황

- 제조업이 80.8%(2,97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 비제조업과 농림어업은 16.8%(617억원)와 2.4%(90억원)를 각각 차지

## 제4장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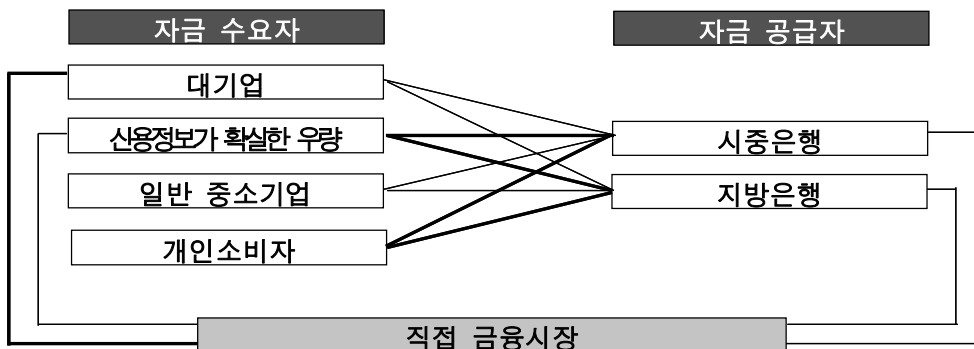
### 제1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1.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2. 경영활동지원 강화

- 1) 「(가칭)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운영
- 2) 「지역 중소기업 금융컨설팅팀」 운영
- 3) 지역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지원

### 제2절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1. 중소기업금융 역할 강화



[그림]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의 비대칭 현상

-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공급선도 기능이 복원되어 금융과 실물경제의 밀착도 제고
- 헌신비용이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분담되고 또한 보상받는 구조 마련

## 2. 금융의 지역 중점산업 육성 역할 강화

- 1) 창업 및 금융지원 강화
- 2) 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원 강화

## 3. 지역산업에 대한 경기조절 기능 강화

- 지역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업,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과잉 투자→과잉 경쟁→경기 침체→연쇄 부도→금융기관 부실화」의 위험이 내재
- 과열 조짐이 있는 업종에 대해 사전 경고 기능을 공유
- 지역경기와 관련한 미세 통계의 작성 및 공유

## 4.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전략 도입

- 1) 중소기업의 니즈 다변화에 따른 비은행의 시장 참여 확대
- 2)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① 담보력 취약으로 중단된 우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② 금융기관의 지원 촉진장치 마련
  - ③ 기술개발 단계별 기술개발자금 지원

## 5. 직접금융지원 강화

- 1) 중소기업 재생펀드 설정
  - 지역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형태로 지원
- 2) 직접금융시장 환경 개선
  -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적, 실무적 지원을 통해 공개를 적극 유도

- 지역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를 설립·유치. 지역중소기업의 직접금융관련 업무지원 역할을 강화. 지역중소기업 발행회사채에 대한 인수·보증기능을 강화

###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 1. 지역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제 구축

- 1)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 확대
- 2)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체계 개선
- 3) 연쇄도산 방지체계 구축

#### 2.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역의 관광, 자원개발, 유료도로와 같은 SOC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이나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수요로 연결.
- 적합한 사업은 장기 수익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충분

### 제4절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1)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
-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 ① 지역기업 정보센터 설립
  - ②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 시스템 마련

##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 제5장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 제1절 지역금융 시스템 도입

-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금융시장과 내발적 지역공동체(지역혁신시스템) 및 금융중개기능이 상호간에 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
- 지역금융 시스템은 지역에서 환원금융을 실현시키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에 기여
- 정보생산과 축적 기능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축을 형성

### 제2절 지역은행 역할 정립

#### 1. 지방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 성격 기능 강화

- 지역 중소기업은 금융 구조조정 이후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
- 지방은행의 퇴출, 시중은행의 소비자 금융의 강화, 은행의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

#### 2. 지역밀착 금융 실현

- 지역소재 기업이나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기준의 대폭 완화와 한도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대출 서비스 강화
- 지역금융 수요의 창출과 지역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

### 3.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는 은행의 존재는 매우 중요
- 금융적 유출의 주요 경로를 차단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강구

## 제3절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 1. 은행 운영체계 개선

- ① 맞춤형 지역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② 지역금융 서비스의 전문화 및 차별화 시행

### 2. 릴레이션십 बैं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① 지역금융기관의 릴레이션십 बैं킹 중요성
- ② 중소기업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 마련
- ③ 지역경제에 대한 릴레이션십 बैं킹 기능 강화

## 제4절 지역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 1. 「지역금융정보센터」 설립 운영

### 2.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기능 강화



## 2. 정책제안

### < 제안과제 1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경영활동지원 강화 사업 추진

- ▶ 「(가칭)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운영
- ▶ 「지역 중소기업 금융컨설팅팀」 운영
- ▶ 지역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지원

### < 제안과제 2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전략 도입

- ▶ 중소기업의 니즈 다변화에 따른 비은행의 시장 참여 확대
-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① 담보력 취약으로 중단된 우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② 금융기관의 지원 촉진장치 마련
  - ③ 기술개발 단계별 기술개발자금 지원

### < 제안과제 3 > 직접금융지원 강화

- ▶ 중소기업 재생펀드 설정
  - 지역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형태로 지원
- ▶ 직접금융시장 환경 개선
  -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적, 실무적 지원을 통해 공개를 적극 유도

- 지역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를 설립·유치. 지역중소기업의 직접금융관련 업무지원 역할을 강화. 지역중소기업 발행회사채 인수·보증기능 강화

#### < 제안과제 4 >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방안

##### ▶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 ①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전담 신용평가기관 설립
- ②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강화

##### ▶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 ① 신용보증제도의 수요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대 필요
- ② 정부출연의 지속적 확대 필요
- ③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선
- ④ 부분보증제도의 비중 증대
- ⑤ 보증료율의 차별화 확대

##### ▶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 ▶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 기술가치보험이란 기존 기술가치담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
- 기술력이 우수한 대덕특구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
- 우선 대상업체는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등록기업, 특허등록기업, 국내신기술등록기업(KT, NT, EM, IT, INNO-BIZ 등)

#### < 제안과제 5 > 지역은행 역할 정립

##### ▶ 지방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 성격 기능 강화

- 지역 중소기업은 금융 구조조정 이후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
- 지방은행의 퇴출, 시중은행의 소비자 금융의 강화, 은행의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
- ⇒ 지역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은행의 설립이 검토

▶ 지역밀착 금융 실현

- 지역소재 기업이나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기준의 대폭 완화와 한도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대출 서비스 강화
- 지역금융 수요의 창출과 지역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
- 지역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사업설명회(로드쇼), 창업설명회, 신기술발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

< 제안과제 6 >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 은행 운영체계 개선

- ① 맞춤형 지역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② 지역금융 서비스의 전문화 및 차별화 시행

▶ 릴레이션십 बैं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① 지역금융기관의 릴레이션십 बैं킹 중요성
- ② 중소기업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 마련
  - 첫째, 일관성 있는 여신방침을 유지. 수천 개사에 이르는 기업고객과의 거래내용을 조직 및 시스템 차원에서 축적하고, 공유

- 둘째, 현금흐름 및 '리스크 프라이싱'(risk pricing) 위주의 대출능력을 갖춘
  - 셋째, 경제·합리성이 높은 영업 모델을 갖춘. 영업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영업팀의 운영을 통한 영업 생산성의 향상
- ③ 지역경제에 대한 릴레이션십 बैं킹 기능 강화
- 장래 기존산업을 대체하여 핵심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한 업종이나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
  - 벤처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 유망한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5
<b>제2장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b> .....	<b>8</b>
제1절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
2. 은행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3
제2절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외국사례 .....	19
1. 일본 .....	19
2. 유럽 .....	21
3. 외국 산업금융지원제도의 시사점 .....	26
<b>제3장 지역 산업금융의 현황과 실태</b> .....	<b>32</b>
제1절 지역금융의 현황 .....	32
1. 금융기관 점포수 .....	32
2. 금융기관 여수신 및 점유율 .....	33
3. 금융기관의 대도시 산업자금 여신 비교 .....	36
제2절 산업금융 실태 .....	42
1. 한국은행 조사분석 내용 .....	42
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48
제3절 대전지역의 산업지원자금 운용실태 .....	54

1.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	54
2. 산업지원자금의 내용과 실태 .....	56
3. 성장단계별 산업자금 지원 내용 .....	60
제4절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 운용 현황 .....	64
1. 부문별 지원 현황 .....	64
2. 업종별 지원 현황 .....	66
<b>제4장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b>	<b>70</b>
제1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	70
1.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	70
2. 경영활동지원 강화 .....	72
제2절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	74
1. 중소기업금융 역할 강화 .....	74
2. 금융의 지역 중점산업 육성 역할 강화 .....	77
3. 지역산업에 대한 경기조절 기능 강화 .....	78
4.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전략 도입 .....	79
5. 직접금융지원 강화 .....	82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	85
1. 지역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계 구축 .....	85
2.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	87
제4절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	90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90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	93
<b>제5장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b>	<b>100</b>
제1절 지역금융 시스템 개선 .....	100
제2절 지역은행 역할 정립 .....	103

1. 지방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 성격 기능 강화 .....	103
2. 지역밀착 금융 실현 .....	104
3.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	105
제3절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	107
1. 은행 운영체계 개선 .....	107
2. 릴레이션십 बैं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109
제4절 지역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	113
1. 「지역금융정보센터」 설립 운영 .....	113
2.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기능 강화 .....	114
<b>제6장 맺음말 .....</b>	<b>117</b>
<b>참고문헌 .....</b>	<b>119</b>

**부 록 :**

1.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 총액한도 운영현황 .....	123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	126
3. 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관련 주요업무 내용 .....	146

## - 표 목 차 -

<표 2-1> 일본의 보험한도 .....	20
<표 2-2>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비교 .....	28
<표 3-1> 대전의 금융기관 점포수 .....	32
<표 3-2> 대전의 금융기관 여수신 .....	33
<표 3-3> 대전의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	34
<표 3-4> 대전의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	35
<표 3-5> 대전의 금융기관별 여신점유율 .....	35
<표 3-6>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일반대출) 비교 .....	37
<표 3-7>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비교 .....	37
<표 3-8>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시설자금) 비교 .....	38
<표 3-9> 기업대출금 분기별 비교 .....	38
<표 3-10>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 .....	39
<표 3-11> 예금은행 예대출(지역별, 말잔) .....	40
<표 3-12> 기관별 예대출(지역별, 말잔) .....	41
<표 3-13>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	43
<표 3-14>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	43
<표 3-15>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평균 금리 비교 .....	45
<표 3-16>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업력별 정책자금 이용 비중 .....	45
<표 3-17> 벤처캐피탈의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 .....	46
<표 3-18>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변화 .....	47
<표 3-19> 벤처펀드 자금의 외부자금 비중 .....	47
<표 3-20> 대전·충남지역 은행대출 심사역의 전공 현황 .....	48
<표 3-21>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금액기준) .....	49
<표 3-22>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금액기준) .....	50
<표 3-23> 외부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 .....	50



<표 3-24>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	51
<표 3-25>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	51
<표 3-26> 신용보증서 발급사정 .....	52
<표 3-27> 부분보증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	52
<표 3-28>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 .....	53
<표 3-29>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	59
<표 3-30> 기관별 자금 융자지원사업 유형 .....	60
<표 3-3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	61
<표 3-32>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	61
<표 3-33>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	62
<표 3-34>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	62
<표 3-35>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 .....	63
<표 3-36> 부문별 지원현황 .....	65
<표 3-37> 업종별 지원현황 .....	66
<표 4-1>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서비스 니즈 변화 .....	82
<표 4-2> 도산방지 특별상담실의 주요기능(안) .....	87

## - 그림 목 차 -

[그림 2-1]	성장단계별 필요자본과 가용자본 .....	11
[그림 2-2]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행태와 특성 .....	13
[그림 2-3]	신용보증체계 .....	22
[그림 2-4]	독일 연방정부 중심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스템 .....	24
[그림 2-5]	프랑스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 구조 .....	25
[그림 2-6]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비교 .....	27
[그림 3-1]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조달 경로 .....	44
[그림 3-2]	산업자금 지원 신청 절차 .....	58
[그림 4-1]	중소사업체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	71
[그림 4-2]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의 비대칭 현상 .....	75
[그림 4-3]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	76
[그림 5-1]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성 .....	101

#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면서, 소득증대와 고용기회 확보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공급 및 지역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유지,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산업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역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합의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과 최근 일련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대출자금 회수 위험부담을 회피하는 영업방침에 따라 안전한 가계담보 대출이 증가한 반면, 산업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금융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금융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대전지역은 지역경기에 대응하고 산업별 금융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금융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각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이 산업체 일반이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연의 기능과 역

할들에 대하여 새롭게 점검해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며, 현 상황은 이러한 문제인식의 바탕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도출해 내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선도적 지역 금융기관의 부재, 각 금융관련 기관의 통합적인 지역금융정보 관리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지역금융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 금융관련기관, 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산업금융 운용방식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역내 자금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해 보고, 지역의 산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도출해 보고, 제도개선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각 금융기관, 금융관련기관, 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이 상호 긴밀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른바 지역금융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혁신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지역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급)-산업(수요)」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로 지역산업체를 기축으로 하는 투자, 생산,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지역자금의 '순환체계'를 회복하는 한편, 산업체에 대한 여신 관련 금융운용(신용보증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대덕을 중심으로 한 유수의 첨단기업과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자금확보 면

에서 애로점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지역금융의 지역산업 육성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 들 예컨대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과 지역기업 정보센터의 설립 등을 현실 금융여건을 감안하면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

또한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신규 창업단계의 지원에서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창업 및 금융지원 기능 강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식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 제도가 개별 기관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지역단위에서의 지역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산업자금과 관련한 지역은행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된 선행연구 자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발견해 내고, 지역금융에 관한 통계청,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의 관련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아울러 지역금융기관의 현황 파악과 대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산업자금과 관련한 각종 여수신 현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지역산업금융에 관한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실조사를 대신하여 최근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시행한 지역관련 분석자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분류 정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정부 및 자자체의 산업자금 지원사업의 내용과 실태를 파악하고, 성장단계별 산업자금 지원 내용들을 각 기관의 중소기업 시책사업들 가운데에서 관련사업들을 도출 정리하고, 아울러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부문별, 업종별 총액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상의 지역산업금융에 관한 현황과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이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지역산업금융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②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③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④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① 지역금융시스템 개선, ② 지역은행 역할 정립, ③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④ 지역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제 2 장

---

###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

---

제1절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외국사례

---



## 제 2 장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사례

### 제1절 산업금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혁신기업 금융의 특성

혁신기업 금융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자금공급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기업의 담보 부족,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자금수급 불일치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6-28쪽).

우선 먼저 혁신기업은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의 응용 정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신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화된 기술이나 혁신적 방법으로 기존의 기술을 응용한다. 자금조달 시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인해 유망한 혁신기업이 스스로 자금조달을 포기하고 마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 하나 혁신기업은 초기단계에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유형자산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유형자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된 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은 투자자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더라도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도덕적해이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유형자산의 매각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혁신기업의 경우

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로 지식, 특허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특정된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 부도 시 처분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술개발단계나 창업단계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의 경우는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유형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과는 달리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혁신기업 금융의 세 번째 특성으로 기술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기업은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위험부담도 수반된다.

따라서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개발 자체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기술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품화한 후 시장개척에 성공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 2) 혁신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특성

혁신기업의 경우 자금의 특성과 원천은 일반적으로 창업 준비단계, 창업, 초기성장단계 및 확장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조달 방안의 유효성에 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8-30쪽).

### (1) 창업초기자금(early-stage financing)

창업초기 자금은 신기술과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시험단계에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개발된 상품의 생산 및 시장개척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서 종자자금(seed money),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과 시장개척자금(first-stage

financ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자자금은 신기술 및 신상품의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원형(prototype)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보통 창업자나 친척 또는 친구의 자본으로 충당한다.

창업자금은 제품개발을 완성하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업화하는 단계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주요 자금원은 창업자나 친지들이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대기업 투자 등으로 부터도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한편 시장개척자금은 제조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해 소요되는 초기 운전자금으로서 주요 자금원은 엔젤투자자, 정부융자 및 보증대출, 전력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삼자 보증(third-party guarantees)등이 있다.

## (2) 기업확장자금(expansion financing)

기업확장자금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확장을 위한 자금으로서 초기확장자금(second-stage financing), 메자닌단계 자금(mezzanin financing), 연결지원자금(bridge financing), 기업매수 및 인수자금(acquisition, MLB financ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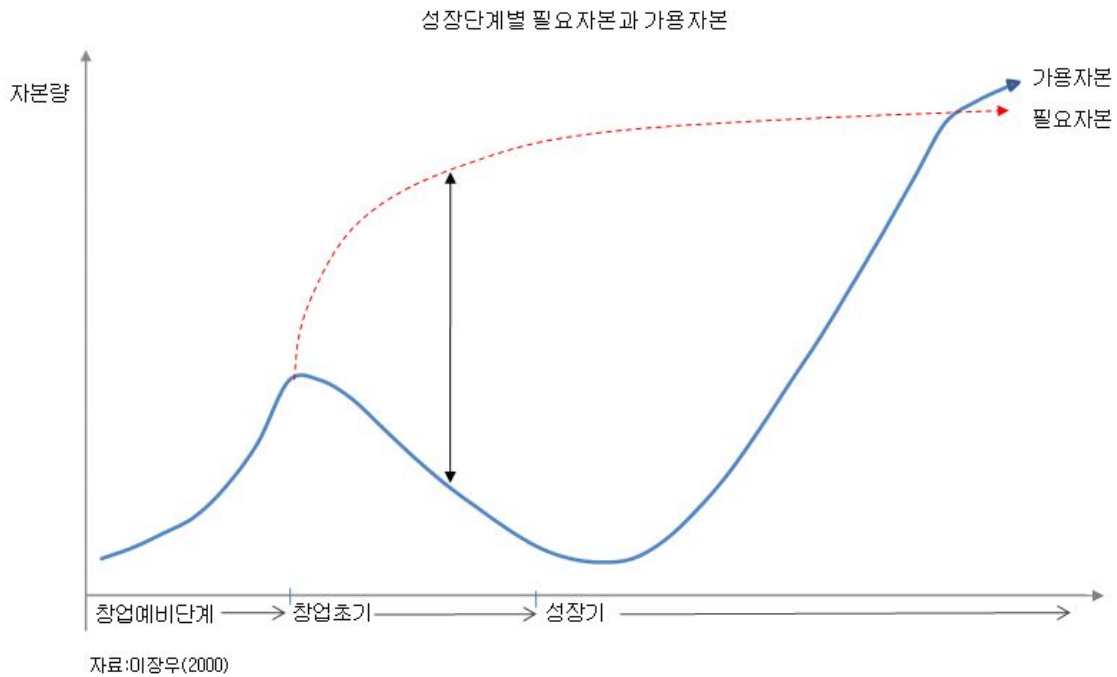
초기확장자금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출하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지만 재고가 증가로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으로서 주로 벤처캐피탈의 자본이 투하된다.

메자닌단계 자금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기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공장확장, 시장확대,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주요 자본 조달원으로는 자체이익, 벤처캐피탈,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현금대출, 자산 담보부대출, 리스, 전환사채 및 무보증 채권 발행 등), 추가적 엔젤투자 등이 이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연결지원자금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기 6개월 내지 1년 전에 자본비율이나 소유구조를 재구성하고 재무구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시 투자되는

자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주식공개를 통해 회수되며 주요 자본 조달원은 벤처캐피탈이다.

한편 기업매수 및 인수자금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주요 자본은 벤처캐피탈, 주식에 의한 자본조달이다.



[그림 2-1] 성장단계별 필요자본과 가용자본

[그림 2-1]은 한 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를 거쳐 성장단계에 진입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자본량과 가용 자본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금원들은 성장단계별로 필요자본에 비해 부족한 가용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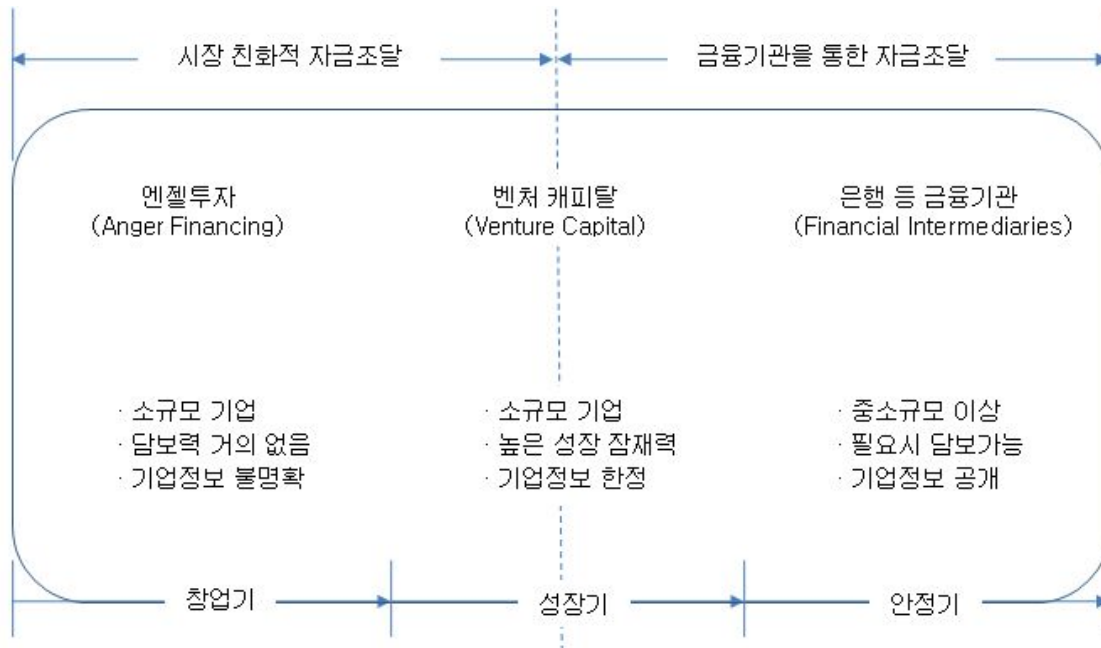
### 3) 시장 및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의 유효성 비교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특성 및 원천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혁신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기업이 담보력이 매우 부족하여 투자실패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1-32쪽).

특히, 창업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은 자금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경우 기업 정보가 불확실하고 담보가 적기 때문에 자금공급을 회피하게 된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개인투자자(혹은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를 지나 시장개척 단계 또는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정보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은행이 자금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2]에서는 혁신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 행태와 특성을 개관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자금은 크게 금융기관과 시장을 통한 조달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친화적 자금은 대표적으로 엔젤 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은 주로 은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본 본문에서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을 통한 방법과는 구별되는 시장 친화적 자금조달 방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2]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행태와 특성

## 2. 은행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취약성은 연구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공급 메커니즘도 효율적이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직·간접적 보증에 의한 공적 지원정책에 의존하여 왔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82-87쪽).

그러나 정부의 공적 신용보증, 자본시장의 위험분산 기능과 병행하여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은행의 대출같이 보완적으로 작동하여야만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혁신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더불어 금융 중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부문이 혁신기업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신용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

우리나라 은행부문도 자본시장 및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량 기업의 발굴을 통한 고객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부문에 대한 여신 거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업과 관련한 신용분석 전문성 부족, 여신심사비용 대비 낮은 기대수익 등으로 인해 은행의 관계형 대출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여신심사 능력이 보다 우월한 외국계 은행이 우량 기업과의 고객 관계를 강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우리 은행부문은 부실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역선택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정보 생산 및 여신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의 신용분석 및 여신심사 능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수록 정보생산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므로 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혁신기업과 관련한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기업의 기술 평가 등을 위한 신용분석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에 혁신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신기술 평가 시스템을 설치하여 은행이 혁신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해 분석할 경우 지원하는 한편, 은행상호간에도 혁신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은 혁신기업의 발굴, 고객관리 및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혁신기업 전문 관리자(relationship manager)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 관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우량 기업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의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은 기업의 부실징후 포착 및 조기시정이 가능하도록 혁신기업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워크아웃, 경영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용의 공급자가 아닌 혁신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대출위험 분산 수단 확충

혁신기업에 대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은행의 관계형 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신용정보와 대출위험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은행이 보유한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신용위험에 따라 여신 금리가 차별화되면 관계형 대출의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되어 관계형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과정의 표준화, 신용분석 체계의 강화, 위험관리 능력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관계형 대출을 위한 별도의 여신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한 대출의 사후적 부실화에 따른 불이익이 관계형 대출 담당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관계형 대출의 경우 직접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와 은행 간 신용디폴트스왑 등 다양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하여 은행의 기업대출 신용위험을 낮추고, 비은행금융회사는 신용디폴트스왑 등을 준거자산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거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토록 하는



등 은행과 자본시장이 혁신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3) 혁신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 활성화

은행 사모펀드 등 은행의 선별기능을 활용한 혁신기업 펀드의 설립과 민간 기업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대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이 용이하여 관계형 대출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은행도 정보생산에 따른 이익을 내부화할 수 있어 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당국은 은행의 혁신기업 지분 보유를 활성화하여 모니터링 및 정보생산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의 경우 현재 은행법상 15%로 설정되어 있는 타회사 출자제한 조항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주식전환 조건부 후순위 대출, 자금사정에 따라 유연한 상환이 가능한 연성대출(soft loans), 팩토링, 리스,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한 직간접 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로 구성된 종합금융상품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 4)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육성

최근 인수·합병 등 은행의 대형화, 그룹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은행의 관계형 대출 여건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출심사역을 감시·감독하는 비용이 증대되므로 대형은행은 대출심사기준 및 기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게 되며, 따라서 대출심사역의 재량이 축소되어 관계형 대출이 약화되게 된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관련 정보가 소실됨에 따라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룹화에 의해 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므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위험 및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Buerger and Udell, 1996).

따라서 지역밀착 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등 지역소재 혁신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용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관계형 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수신 상품 공동개발, 마케팅 및 전산부문의 공동투자, 신용정보회사 공동설립 등 지방은행간 업무제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이 기업관련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간의 확충을 위해 신용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상설 기관으로 지방은행협의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적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선별기능이 취약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신용확대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 하에서는 선별기능이 제고되기 어려우며 지원 대상 기업의 활동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할 인센티

브 또한 취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보증제도의 보완과 은행의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

즉 은행의 신용보증 심사 및 적격기업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별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적인 보증료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서근우 2003). 아울러 사모펀드 등을 통하여 은행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토록 하고 은행과 신보·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토록 하는 등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을 점차 간접보증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과 후순위채를 공동인수하게 됨으로써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어 여신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를 보유함으로써 투자대상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유인이 제고된다.

공적보증이 남용되면 은행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은행의 선별기능과 모니터링 유인이 저해되어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와 은행 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적보증과 은행 관계형 대출 간에 보완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공적보증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은 창업 및 초기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에 집중 배분하고, 기술 및 상업적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은행의 관계형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절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해외사례

### 1. 일 본<sup>1)</sup>

#### 1) 기업펀드(기금)

기업들은 그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해도 자본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지 못해 사업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산업성은 기금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 기업 자본금이 늘어나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4년 중소기업 펀드(기금)를 설립하였다. 일본 정부가 벤처형 기업이나 산업재생형이 아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금을 설립하였다.

이번에 설립된 중소기업기금은 경제산업성 소관 특수법인인 중소기업종합사업단이 50%를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대형 상사와 금융기관이 부담하였다. 출자총액은 300억엔(약 3천억원) 규모이다. 중소기업기금은 3~5년 이내 주식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형 펀드와는 달리 장기간 출자를 해주며, 기업이 주식을 되사는 방식 등으로 자금이 회수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경영 부진에 빠져있는 지방 중소기업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별로 '중소기업 재생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4년 1월 오이타(大分)현에 첫 지방 펀드가 설립되었다.

#### 2) 금융세이프티넷보증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5일

---

1) 부산발전연구원, 72-74쪽 자료 정리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향 2002」에 의거하여 「경제산업성은 2002년도부터 창의력과 사업의지가 강한 중소기업 희생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세이프티넷(safety-net)을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불량채권 처리를 추진하면서 성장가능성이 있고 사업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2년 11월 22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을 개정·공포하여 동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이프티넷보증은 거래기업의 도산, 금융기관의 파산, 자연재해 등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신용보증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티넷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 일본의 보험한도

(단위 : 백만엔)

구 분	일반한도	특별한도	계
보통보험	200	200	400
무담보보험	80	80	160
특별소액보험	12.5	12.5	25

주 : 1) 신용보증협회와 중소기업간에 체결된 보증계약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용보증협회와 중소기업총합사업단간에는 포괄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됨.

2) 보통보험 : 원칙적으로 담보와 보증인이 요구됨.

3) 무담보보험 :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요구되지만, 5천만엔까지는 일반적으로 제3자입보를 면제하고 있음.

4) 특별소액보험 :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음.

자료 : 신용보증기금,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최근 동향, 보증월보, 2003. 7.

2002년 개정법에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세이프넷보증이 추가되었다. 첫째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점축소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금융거래조정 등 경제산업장관이 지정한 사항들이 시행됨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과의 금융차입 감소, 기타 경제산업장관이 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

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이다.

중전의 세이프티넷보증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차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는 경우에도 거래 중소기업이 세이프티넷보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불량채권을 정리회수기구(RCC) 등 특정 협정은행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거래 위축 또는 기타 경제산업장관이 정한 사유 발생으로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에서 적정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등으로 재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불량채권을 정리회수기구에 양도하여 불량채권을 처리하게 되지만, 이 경우 정리회수기구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해 중소기업은 정리회수기구로부터 신규여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리회수기구로 대출채권이 양도된 중소기업 중에서 재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세이프넷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유 럽<sup>2)</sup>

### 1) 신용보험제도

신용보험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신용으로 공급하는 판매기업, 즉 채권자가 채무자인 구매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말한다. 신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건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실손보상보험(indemnity insurance)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여 채권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성격을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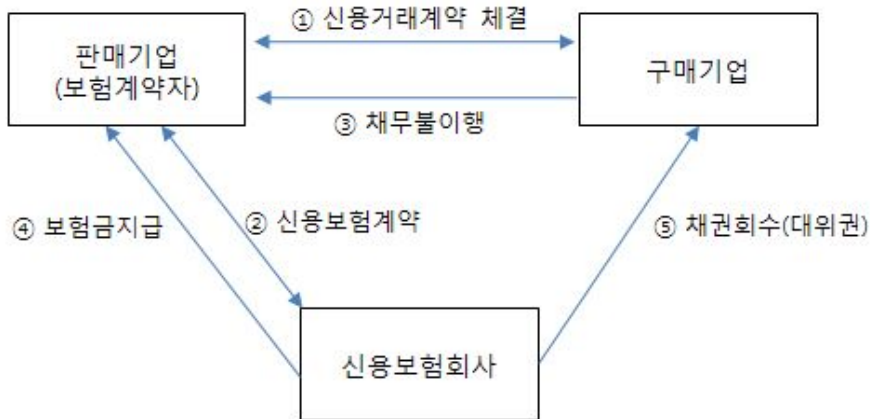
---

2) 부산발전연구원, 77-81쪽 자료 정리

있다.

신용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인 채권자간의 계약이다. 보험자는 상법상의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금지급의무, 보험료반환의무 이외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업무, 채권회수대행업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업무 등을 수행한다. 채권자는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상법상의 보험료지급의무, 통지의무, 고지의무 이외에도 보험기간동안 보험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보험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일정시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자는 채무자인 구매기업별로 신용평가자료에 의거하여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연간 보상한도를 결정한다. 신용보험은 피보험자의 비례부담원칙에 의하여 일부보험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기부담률을 제외한 손해액의 50~90%(부보율)를 담보한다. 신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비례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손해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위험회피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그림 2-3] 신용보험체계

이러한 신용보험제도는 처음 유럽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현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뿐 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 신용보험시장은 유럽의 5대 신용보험회사인 프랑스의 Euler-SPAC과 독일의 Hermes와 Gerling, 그리고 네덜란드의 NCM 등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세계 신용보험시장의 규모는 보험료기준으로 약 50억 달러인데, 이 중 독일 25%, 프랑스 20%, 영국 14%, 스페인 8%, 이탈리아 7% 등 유럽의 점유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2) 독일의 주거은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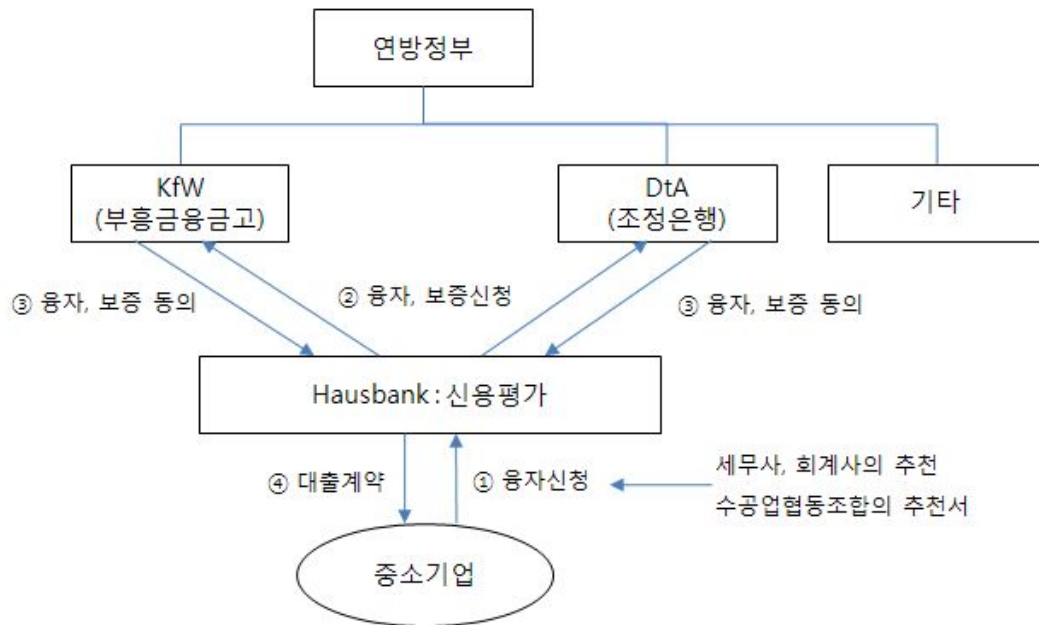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금융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구는 Hausbank(주거은행)로 불리는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 등이며, Hausbank는 대출지원시 일정비율의 자기은행 자금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부흥금융금고)와 DtA(조정은행)는 Hausbank에 대해 재융자나 위험분담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KfW는 시중은행이 보유한 고위험 중소기업 대출자산을 인수하여 이들 금융기관들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신규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fW는 이들 자산을 인수한 후, 同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여 시장에 다시 매각한다.

Hausbank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Hausbank는 KfW와 DtA로부터 금융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Hausbank의 신용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Hausbank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세무사, 회계사, 수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거친 추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용보증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 단위에서 실시되지만, 통상 업종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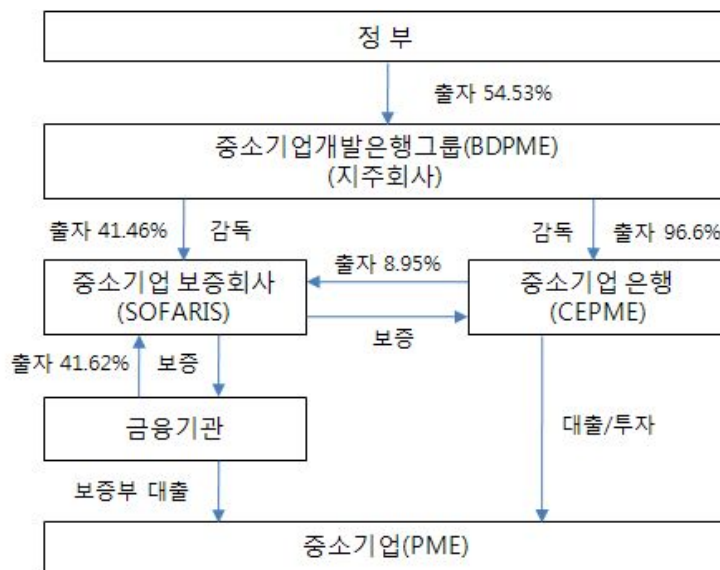
[그림 2-4] 독일 연방정부 중심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스템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2000. 9.

### 3) 프랑스의 보증·대출 원스톱지원체계

프랑스는 중소기업 전문 국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주회사 형태인 중소기업개발은행그룹(BDPME)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보증회사(SOFARIS)와 중소기업은행(CEPME)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 보증회사 사장이 지주회사 사장을 겸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중소기업개발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은행은 민간은행이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 공동투자자(co-financer)로 참여한다.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대출의 25~50%를 공동 투자하게 된다. 원리금에 대한 상환만기는 2년부터 15년으로 다양하게 운용된다.



[그림 2-5] 프랑스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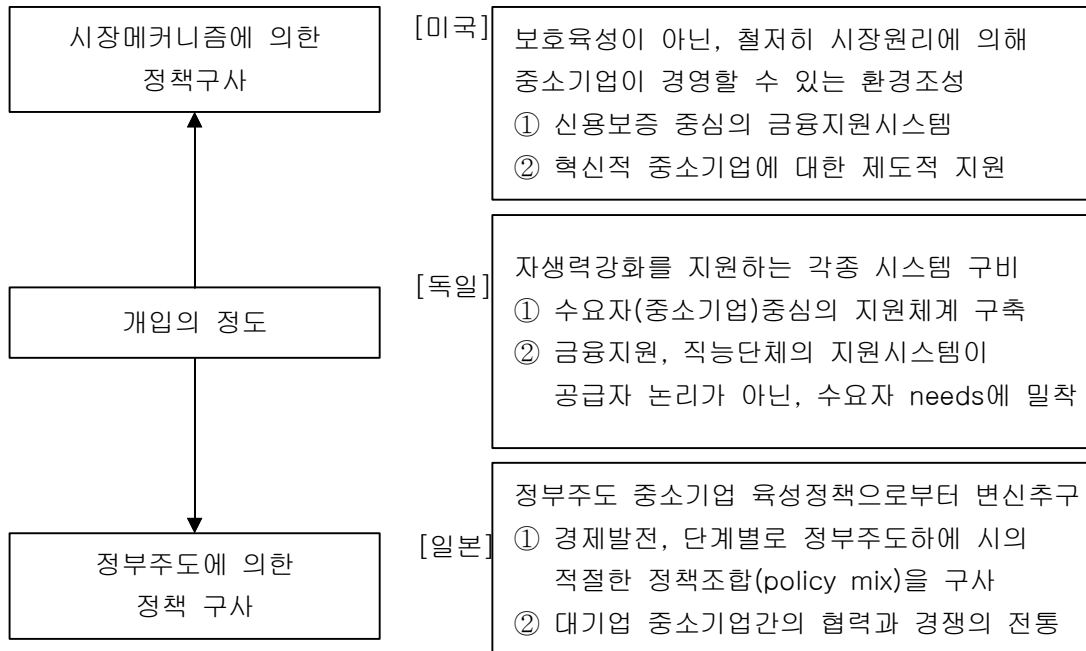
보증회사는 보증규모가 3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창업 등 7가지 핵심 사업에만 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창업, 설비투자, 재무구조개선, 벤처캐피탈의 지분투자, 단기유동성 지원, 회사인수, 정부 납품 후 단기유동성 지원 등이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분야의 보증제도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보증회사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에 보증을 제공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증대상은 종업원 250명 이하, 연간 매출액이 4천만유로 이하, 자산이 2천 7백만유로 이하인 기업이다. 보증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50%를 보증하지만 창업보증은 70%까지 가능하다. 장기자금의 공급을 위해 2년에서 10년까지 장기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심사는 30만유로 이하 보증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30만유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실시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75만유로이고,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6%이다.

### 3. 외국 산업금융지원제도의 시사점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첫째,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창업지원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미국 SBIC의 원스톱 창업지원 및 LowDoc 프로그램 등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일본의 경우도 1999년 정한 중소기업 기본법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창업,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루어내고 있다(고규환, 50-52쪽).



[그림 2-6]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비교

둘째, 내수중심 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81.9%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2년 매출액기준)를 점유하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와 밀착된 중소기업정책은 지역경제 및 클러스터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퇴역경영지도자제도(SCORE)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각종 노하우·정보제공의 모범적 사례이며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하고 동료 사업자의 평가에 기초한 대출 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체제의 벤치마킹을 이루고 있다.

셋째, 혁신적 중소기업을 차별화 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술선진국의 경우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축소되고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자극하기 위한 주요지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표 2-2>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비교

구 분	주 요 내 용
미 국	· 중소기업자가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용자보증제도가 중심
일 본	· 정부계 중소기업금융 3기관(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 공고, 상공조합중앙공고)에 의한 투자 고도화 용자(중소기업사업단) ·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중소기업의 신용력·담보력 보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소기업 체질강화 자금조성
독 일	· 유럽부흥계획(ERP)특별기금에 의한 조성책이 중심 · 부흥금융공고(KfW)등의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 · 신용보증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단위에서 실시되나 통상, 업종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수행

자료 : 중소기업청 「선진국의 중소기업정책」, 2000.5, pp.447~451

선진국은 이상에서와 같은 중소기업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산업금융의 시행과 함께, 지역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먼저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기관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능 확충에 주력하면서 일반적인 여신심사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종전의 Credit Scoring에 의한 대출심사보다는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대출심사를 하는 소위 Relationship Lending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Relationship Banking 기능 강화를 통해 대출심사의 성과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Relationship Banking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 지역금융기관의 Relationship Banking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서둘러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영업수지 균형만을 위한 안일한 경영관행으로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 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밀착형 경영과 더불어 지역특화형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전략 산업이나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 금리차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가지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제 3 장

---

### 지역 산업금융의 현황과 실태

---

제1절 지역금융의 현황

제2절 산업금융 실태

제3절 대전지역의 산업지원자금 운용실태

제4절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 운용현황

---

# 제 3 장 지역 산업금융 현황과 실태

## 제1절 지역금융의 현황

### 1. 금융기관 점포수

대전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2008년 현재 597개로 예금은행 204개, 비은행금융기관 393개로 이 중 신용협동기구가 294개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예금은행은 전체 금융기관 중 34.2%, 비은행금융기관은 6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 대전의 금융기관 점포수

( 단위 : 개, %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예금은행	185 (30.6)	186 (36.5)	196 (38.4)	181 (32.8)	189 (33.2)	199 (34.1)	204 (34.2)
비은행금융기관	420 (69.4)	324 (63.5)	315 (61.6)	370 (67.2)	381 (66.8)	385 (65.9)	393 (65.8)
(신용협동기구)	221 (36.5)	212 (41.6)	202 (39.5)	283 (51.4)	290 (50.9)	290 (49.7)	294 (49.2)
합 계	605 (100.0)	510 (100.0)	511 (100.0)	551 (100.0)	570 (100.0)	584 (100.0)	597 (100.0)

주 1) 비은행금융기관 : 개발기관, 상호신용금고,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생명보험회사

2) 신용협동기구 :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3) ( )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금융기관 점포수 증감 추이를 보면, 예금은행은 2000년 이후 점포수가 지속적인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2004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은행금융기관 중 신용협동기구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감소추세에 따라 2004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 금융기관 여수신 및 점유율

대전지역 금융기관의 2008년말 현재 여신은 39조 570억원이고, 수신은 24조 6,910억원으로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신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예금은행의 수신액이 크게 많았지만,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는 예금은행 수신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전의 금융기관 여수신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신	26,523 (2.22)	29,453 (2.32)	30,328 (2.15)	35,757 (2.34)	39,057 (2.26)
예금은행	14,449 (2.67)	14,995 (2.67)	15,709 (2.65)	14,896 (2.51)	16,458 (2.44)
비은행금융기관	8,169 (1.67)	8,924 (1.69)	10,302 (1.65)	16,194 (2.25)	17,654 (2.13)
생명보험회사	3,905 (2.35)	5,534 (3.13)	4,318 (2.20)	4,666 (2.19)	4,945 (2.17)
여 신	18,482 (2.37)	20,038 (2.36)	21,962 (2.27)	23,323 (2.09)	24,691 (1.95)
예금은행	13,355 (2.36)	14,522 (2.37)	15,826 (2.26)	16,605 (2.07)	17,428 (1.90)
비은행금융기관	4,098 (2.41)	4,534 (2.38)	5,012 (2.31)	5,641 (2.21)	6,132 (2.16)
생명보험회사	1,029 (2.31)	983 (2.14)	1,125 (2.31)	1,076 (1.97)	1,130 (1.81)

주 : ( )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여신액의 기관별 추이를 보면, 예금은행의 여신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비은행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순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대비 수신액 비중은 2008년 현재 2.26%이고 여신액 비중은 1.9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액의 전국대비 비중은 연도별로 볼 때 횡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별로는 예금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전국대비 수신액 비중은 감소추세이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전국대비 수신액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신액의 전국대비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별로도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비은행금융 기관별 세부 여신 규모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여신 규모의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49.8%), 신용협동조합(17.9%), 새마을금고(14.6%), 상호저축은행(1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대전의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단위 : 십억원, %)

구 분	비은행 금융 기관 (계)	종합 금융 회사	신탁 회사	상호 저축 은행	신용 협동 조합	상호 금융	새마을 금고	기타
2004	4,098	-	25	541	574	2,191	708	61
2005	4,534	-	27	718	636	2,389	681	95
2006	5,012	-	92	853	734	2,522	675	137
2007	5,641	-	225	829	901	2,756	762	169
2008	6,132 (100.0)	5 (0.1)	150 (2.4)	696 (11.4)	1,098 (17.9)	3,054 (49.8)	897 (14.6)	232 (3.8)

금융기관별 수신총액 점유율을 보면, 2008년 현재 예금은행의 수신점유율이 42.1%, 비은행금융기관 45.2%, 생명보험회사 12.7%로 각각 나타나 있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일반은행의 수신점유율이 특수은행보다 3배 정도 높으며, 비은행금융

기관은 상호금융기관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예금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수신점유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3-4> 대전의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 단위 :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신	100.0	100.0	100.0	100.0	100.0
예금은행	54.5	50.9	51.8	41.7	42.1
일반은행	41.0	38.2	38.5	30.8	31.5
특수은행	13.5	12.7	13.3	10.9	10.6
비은행금융기관	30.8	30.3	34.0	45.3	45.2
상호금융	12.0	12.8	13.8	11.6	11.3
기타	18.8	17.5	20.2	33.7	33.9
생명보험회사	14.7	18.8	14.2	13.0	12.7

금융기관별 여신총액 점유율을 보면, 2008년 현재 예금은행의 여신점유율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어서 비은행금융기관 24.8%, 생명보험회사 4.6%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표 3-5> 대전의 금융기관별 여신점유율

( 단위 :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신	100.0	100.0	100.0	100.0	100.0
예금은행	72.3	72.5	72.1	71.2	70.6
일반은행	51.7	49.7	50.2	50.0	49.7
특수은행	20.6	22.8	21.8	21.2	20.9
비은행금융기관	22.2	22.6	22.8	24.2	24.8
상호금융	11.9	11.9	11.5	11.8	12.4
기타	10.3	10.7	11.3	12.4	12.5
생명보험회사	5.6	4.9	5.1	4.6	4.6

예금은행 중에서는 일반은행의 여신점유율이 특수은행보다 2.5배 이상 높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기관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예금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여신점유율은 추세적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여수신 점유율에서, 대체로 수신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예금은행의 점유율이 각각 42~45% 수준으로 비슷한 반면, 여신은 주로 예금은행에서 대략 70%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기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 3. 금융기관의 대도시 산업자금 여신 비교

2009년 2사분기까지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일반대출 규모는 7,729십억원으로 부산(31,327십억원), 대구(21,301십억원), 광주(11,319십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광역시 가운데 대전과 시세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는 광주지역과 비교해 볼 때 대전은 2007년 1사분기 이후 대략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부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6>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일반대출) 비교

(단위 : 십억원)

구 분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2007 1분기	23,673	17,285	9,350	6,327	5,356
2007 2분기	25,899	17,985	10,002	6,682	5,890
2007 3분기	26,754	18,414	10,344	6,933	6,331
2007 4분기	27,210	18,519	10,538	6,950	6,344
2008 1분기	28,195	19,116	10,995	7,162	6,699
2008 2분기	29,591	19,669	11,143	7,455	7,061
2008 3분기	30,255	20,037	11,320	7,529	7,432
2008 4분기	30,354	19,848	11,130	7,484	7,552
2009 1분기	30,927	19,597	11,338	7,564	7,766
2009 2분기	31,327	21,301	11,319	7,729	7,820

위의 표에 나타난 기업대출금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비교해 구분해 보면, 먼저 운전자금 면에서 볼 때 대전지역은 2009년 2분기에 있어서 5,976 십억원으로 광주 등 타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비교

(단위 : 십억원)

구 분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2007 1분기	19,132	13,687	8,003	5,543	4,354
2007 2분기	20,823	14,194	8,506	5,852	4,758
2007 3분기	21,111	14,440	8,769	5,999	5,058
2007 4분기	21,008	14,331	8,813	5,951	4,924
2008 1분기	21,760	14,812	9,218	6,075	5,199
2008 2분기	22,681	15,193	9,356	6,240	5,417
2008 3분기	23,000	15,407	9,370	6,251	5,649
2008 4분기	22,791	15,240	9,131	6,135	5,699
2009 1분기	23,374	15,132	9,314	6,197	5,863
2009 2분기	23,295	16,367	9,113	5,976	5,762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비교에 있어서도 운전자금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8>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중소기업 시설자금) 비교

(단위 : 십억원)

구 분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2007 1분기	4,541	3,598	1,347	784	1,002
2007 2분기	5,076	3,791	1,495	831	1,132
2007 3분기	5,644	3,973	1,575	934	1,272
2007 4분기	6,202	4,187	1,725	999	1,420
2008 1분기	6,436	4,304	1,778	1,088	1,500
2008 2분기	6,909	4,475	1,787	1,215	1,644
2008 3분기	7,255	4,627	1,950	1,278	1,783
2008 4분기	7,562	4,608	2,000	1,349	1,853
2009 1분기	7,553	4,465	2,024	1,367	1,903
2009 2분기	8,032	4,934	2,206	1,754	2,058

<표 3-9> 기업대출금 분기별 비교

(단위 : 십억원)

구 분		분기 년	1	2	3	4
			예 금 은 행  기 업 대 출 금	부 산	2007	24,495
2008	29,526	31,013			31,907	32,052
2009	32,352	32,650			-	-
대 구	2007	17,943		18,666	18,932	19,297
	2008	20,110		20,768	21,217	21,113
	2009	20,707		22,613	-	-
광 주	2007	9,526		10,282	10,504	10,772
	2008	11,227		11,575	11,911	11,667
	2009	11,734		11,739	-	-
대 전	2007	7,065		7,443	7,518	7,645
	2008	8,209		8,322	8,633	8,351
	2009	8,341		8,505	-	-
울 산	2007	5,847	6,433	6,821	6,943	
	2008	7,372	7,733	8,159	8,295	
	2009	8,607	8,605	-	-	

<표 3-10> 예금은행 지역별대출금(말잔)

(단위 : 십억원)

구분	기관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 화 대 출 금	전 국	예금은행	538,261	565,655	613,923	699,430	803,724	917,110
		일반은행	409,883	424,161	450,568	512,706	586,951	661,841
		시중은행	371,420	384,122	404,202	459,439	524,255	594,268
		지방은행	31,727	35,567	40,155	47,332	55,682	60,072
		외국은행	6,736	4,473	6,211	5,935	7,014	7,502
		특수은행	128,378	141,494	163,354	186,725	216,773	255,269
	부 산	예금은행	35,959	37,936	40,642	45,271	51,078	55,777
		일반은행	29,349	30,481	31,925	35,077	39,477	42,418
		시중은행	21,511	21,933	22,185	23,397	25,858	27,937
		지방은행	7,422	8,380	9,552	11,508	13,437	14,304
		외국은행	416	168	188	172	181	177
		특수은행	6,610	7,456	8,717	10,194	11,602	13,359
	대 구	예금은행	23,345	24,529	27,482	31,072	33,540	35,402
		일반은행	18,031	18,590	20,160	22,783	24,933	26,164
		시중은행	11,117	11,183	11,892	13,333	14,509	15,164
		지방은행	6,914	7,406	8,266	9,417	10,375	10,946
		외국은행	-	-	2	33	49	54
		특수은행	5,314	5,939	7,322	8,289	8,607	9,238
	광 주	예금은행	12,130	12,686	13,689	15,534	17,922	19,197
		일반은행	8,749	8,828	9,063	10,372	12,249	13,129
시중은행		5,442	5,209	4,950	5,762	6,920	7,503	
지방은행		3,307	3,619	4,113	4,610	5,329	5,625	
특수은행		3,381	3,858	4,626	5,163	5,672	6,069	
대 전	예금은행	12,115	13,355	14,522	15,826	16,605	17,428	
	일반은행	9,098	9,554	9,959	11,028	11,671	12,266	
	시중은행	9,098	9,554	9,957	10,993	11,611	12,186	
	지방은행	-	-	-	-	-	2	
	외국은행	-	-	2	35	60	79	
울 산	예금은행	3,016	3,801	4,563	4,797	4,934	5,162	
	예금은행	6,839	7,398	8,096	10,339	12,360	14,242	
	일반은행	5,385	5,643	6,033	7,626	9,067	10,248	
	시중은행	4,058	4,116	4,380	5,356	5,928	6,876	
	지방은행	1,327	1,527	1,653	2,271	3,139	3,372	
특수은행	1,455	1,755	2,063	2,712	3,292	3,994		

예금은행의 기업대출금 비교와 마찬가지로 예금은행 예대율 역시 지역의 자금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전기간에 걸쳐 다른 비교 도시들에 비해서 예대율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대도시의 경우 최근 3-5년 기간 동안 예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8년 대전지역 예대율 85.4%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1> 예금은행 예대율(지역별, 말잔)

(단위 : %)

구 분	예대율 ( 금융자금대출금 / 총예수금 )					
	전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00	65.4	60.5	71.9	65.6	54.0	72.7
2001	67.4	71.1	73.4	70.7	55.4	74.5
2002	72.6	86.0	87.5	80.7	74.9	85.3
2003	76.0	94.2	92.2	93.6	74.8	87.4
2004	77.9	102.2	99.1	99.1	84.5	95.1
2005	78.8	106.4	103.2	104.5	86.9	98.9
2006	80.6	116.3	114.3	121.2	89.0	119.6
2007	85.1	119.5	115.7	126.9	90.6	132.2
2008	85.9	122.6	107.3	122.9	85.4	128.6

지역별 예대율 비교를 금융기관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지역과 다른 지역들과의 예대율 차이가 발생한 주요 요인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모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지역내 정책자금 배정 노력이 소홀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내 각 금융기관들의 대출관행이 타 지역들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3-12> 기관별 예대율(지역별, 말잔)

(단위 : %)

구 분	기 관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 대 율 ( 금 용 자 금 대 출 금 / 총 예 수 금 )	전 국	예금은행	76.0	77.9	78.8	80.6	85.1	85.9
		일반은행	77.7	79.5	79.5	81.8	86.9	87.3
		시중은행	79.0	80.3	79.8	81.9	87.3	87.5
		지방은행	67.3	72.0	72.8	78.8	80.9	83.0
		외국은행	66.2	80.1	121.1	111.3	111.9	124.6
		특수은행	70.5	73.0	76.7	77.1	80.2	82.2
	부 산	예금은행	94.2	102.2	106.4	116.3	119.5	122.6
		일반은행	93.7	100.8	103.9	112.4	114.0	117.2
		시중은행	109.5	116.8	117.3	123.6	131.3	127.1
		지방은행	66.0	73.5	81.3	94.2	90.3	100.7
		외국은행	94.8	348.6	258.3	246.3	478.8	803.6
		특수은행	96.2	108.2	117.0	132.2	143.3	144.1
	대 구	예금은행	92.2	99.1	103.2	114.3	115.7	107.3
		일반은행	87.3	92.2	93.4	103.5	105.5	99.1
		시중은행	107.7	113.5	115.2	133.3	140.3	130.1
		지방은행	66.0	7.01	72.5	77.9	77.4	73.5
		외국은행	-	-	30.6	78.9	209.9	1,085.4
		특수은행	114.6	130.2	145.3	160.1	160.3	140.4
	광 주	예금은행	93.6	99.1	104.5	121.2	126.9	122.9
		일반은행	86.8	91.6	89.6	107.7	113.4	111.3
		시중은행	108.5	109.3	102.1	118.2	136.7	132.9
		지방은행	65.6	74.4	78.1	97.0	92.9	91.4
		특수은행	122.4	125.7	163.6	167.2	175.4	161.4
	대 전	예금은행	74.8	84.5	86.9	89.0	90.6	85.4
		일반은행	73.9	83.2	81.8	85.7	88.6	82.8
		시중은행	73.9	83.2	81.8	85.7	88.3	82.4
지방은행		-	-	-	-	-	5.5	
외국은행		-	-	38.6	90.7	260.1	1,091.1	
특수은행		78.1	88.6	103.2	99.2	96.3	93.4	
울 산	예금은행	87.4	95.1	98.9	119.6	132.2	128.6	
	일반은행	86.7	91.7	93.7	114.3	128.1	126.4	
	시중은행	94.7	95.4	97.0	114.9	124.0	127.1	
	지방은행	69.2	83.3	86.1	113.0	136.6	124.8	
	특수은행	89.9	108.6	118.9	137.7	145.1	134.8	

## 제2절 산업금융 실태

산업금융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조사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신하여 2009년 2-3월간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운용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과, 2008년 10-11월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분석한 바 있는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본보고서상 관련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1. 한국은행 조사 분석 내용

- 조사기간 : 2009.2.2~3.6일
- 조사대상 :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원사 315개 업체
- 조사방법 : 우편 및 방문 조사
- 회 수 율 : 54.3% (171개 업체 응답)

#### 1)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저하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1998.6월)하여 현재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내부적으로 지방은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기업여건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은행 총대출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2008년말)을 지역별로 보면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충남(46.3%)과 강원(38.4%) 지역이 여타 지역(54.4% ~ 61.1%)들에 비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2008년말 기준)

(%)

광주	부산	대구경북	전북	제주	강원	대전충남
59.8	54.4	58.2	57.2	61.1	38.4	46.3

자료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지역경제동향

이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39.6%, 2008년말)이 지방은행(66.7%)보다 상당히 낮은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신관리시스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서의 하나은행이 이 지역의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중은행(7) : 국민, 우리, 신한,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외환
- 지방은행(6)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표 3-14>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2008년말 기준)

(%)

시중은행 <sup>1)</sup>	지방은행	특수은행 <sup>2)</sup>
39.6	66.7	56.3

- 주 : 1)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2)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자료 : 금융감독원

## 2) 자금조달 경로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경로 가운데 은행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등 전통적인 벤처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데다 벤처기업의 미성숙 등으로 기업공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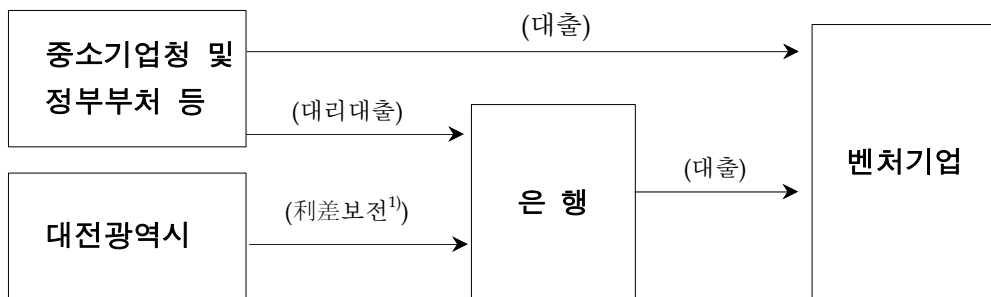
우리나라와는 달리 벤처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시 주식발행 의존도가 약 90%로 매우 높으며,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있어서 엔젤 및 벤처캐피탈 자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상 은행으로부터의 조달에는 정책지원 성격의 보증 등에 의한 대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증부 대출은 벤처기업 은행 대출의 약 2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3) 정책자금 조달 방식

벤처기업의 정책자금은 ① 대전시·충청남도 등 지자체, ② 중소기업청, ③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의 현행 여신운용 시스템상 추가적인 은행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정책자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산업은 높은 리스크와 자금회수의 장기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다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3-1]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조달 경로

주 : 1)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  
(예 : 은행대출금리가 8%이고 정책자금금리가 5%일 경우 3%p를 지급)

설문조사 결과 정책자금 이용은 벤처기업의 전체 자금 조달중 22%로 은행 대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4.7%로 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 6.8%보다 2.1%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기업운전자금 만기를 통상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정책자금의 만기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3년,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상으로 기업입장에서 자금운용상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표 3-15>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평균 금리 비교

(%, %p)

은행대출(신용, A)	정책자금(B)	A - B
6.8	4.7	2.1

주 : 1) 조달금액 가중평균 금리

2)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9.2월) 결과

한편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업력별 정책자금 이용 현황을 보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업력별로 살펴보면 업력 3년 이하가 7.3%, 3~7년의 중기 기업의 비중이 16.2%에 불과한 데 반해, 7년 초과 기업은 76.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6>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업력별 정책자금 이용 비중

(%)

3년 이하	3~7년	7년 초과	(10년 초과)	계
			48.8	
7.3	16.2	76.5	48.8	100.0

주 : 1)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9.2월) 결과

이처럼 창업기와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은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이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를 주된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대전·충남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투자비중을 보면 창업기 기업과 성숙기 기업에 대한 투자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업력별로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하의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41.6%, 7년 초과 기업이 44.2%로 높은 반면, 창업후 3~7년 중기기업의 비중은 14.2%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7> 벤처캐피탈의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 (%)

3년 이하	3년 초과 7년 이하	7년 초과		계
			(10년 초과)	
41.6	14.2	44.2	25.8	100.0

주 : 1)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은행, 2009.2월) 결과

창업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모태펀드<sup>3)</sup> 출자 등 정부가 벤처캐피탈 육성 과정에서 창업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한 데에 기인한다.

한편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벤처캐피탈이 상업화 정착 이후 현금 흐름이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 기업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은 벤처캐피탈이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업화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에 소극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투자 비중 변화(전국)를 보면 중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3)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정부기금으로 조성한 펀드로서 벤처펀드(子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하며  
- 동 펀드는 출자대상 선정시에 창업기(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대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8>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sup>1)</sup> 변화 (%)

업 력	2004	2005	2006	2007	2008
3년 이하	28.7	26.0	30.3	36.8	40.1
3년 초과 7년 이하	57.2	55.0	50.7	38.1	35.2
7년 초과	14.0	19.0	18.9	25.1	24.6

주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는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의 외부자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기업의 안정성이 점점 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벤처캐피탈 운용인력 중 기술 부문 및 기술관련 경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1%에 불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처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기반한 수익전망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3-19> 벤처펀드 자금의 외부자금 비중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1.7	82.5	83.6	85.7	86.0	87.2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출 심사역들 중 첨단분야를 심사할 이공계 전문심사역의 비중이 매우 작은 점도 벤처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이 대출 심사기준으로 정확히 반영되

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20> 대전·충남지역 은행대출 심사역의 전공 현황 (%)

경제·경영	인문·사회	공과 계열	기 타
66.1	17.8	3.4	12.7

주 : 1)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 중소기업중앙회 :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실태 및 자금운영과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2. 조사기간 : 2008. 10. 15 ~ 11. 30

3.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3. 분석대상 :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638개

#### 4. 조사내용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전망
-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용현황
- 납품대금의 결제수단 및 어음제도에 대한 견해 등

#### 5. 표본설계

- 모집단
  - 통계청 2006년 기중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 표준산업 분류상 상시종사자수 5~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단, 제조업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16, 23, 37업종은 제외)



## 1) 금융기관 이용현황 및 대출형태

### (1)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44.3%로 가장 높았고, “신용보증서 대출” 26.7%, “순수 신용대출”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과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전체의 “71.0%”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순수 신용대출”은 13.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에 비해 “신용보증 대출”과 “은행 지급보증”은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순수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금액기준)

(단위 : %)

구 분	부동산 담 보	신 용 보증서	예적금 담 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 보 증
2008년(A)	44.3	26.7	6.9	4.0	13.8	4.3
2007년(B)	47.2	21.1	7.8	4.1	16.9	2.9
증감(A-B, %p)	△2.9	5.6	△0.9	△0.1	△3.1	1.4

### (2) 차입자금 비중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1.5%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 21.8%, “비은행(제2금융권)금융기관” 3.9%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은행자금”은 줄어든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늘어났다. 한편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93.3%”로 은행의존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2>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금액기준)

(단위 : %)

구 분	은행자금	정책자금 <sup>1</sup>	비은행 금융기관 <sup>2</sup>	주식	회사채	사채	해외자금 차 입
2008년(A)	71.5	21.8	3.9	0.2	0.1	1.8	0.5
2007년(B)	74.3	21.7	2.1	0.0	0.4	1.2	0.2
증감 (A-B, %p)	△2.8	0.1	1.8	0.2	△0.3	0.6	0.3

주 : 1 지경부, 중기청 등의 정부 재정자금을 말함(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직접대출도 포함)

2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함

### (3)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

2008년에 중소기업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로는 “원부자재 구입” 41.7%, “설비투자” 28.6%, “인건비 지급”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원부자재 구입”과 “기술개발” 등에 사용한 비중은 늘었으나 “설비투자”와 “부채상환”에 사용한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 외부 차입자금의 주요 사용처

(단위 : %)

구 분	설비투자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 입	부채상환	기술개발
2008년(A)	28.6	16.8	41.7	8.4	4.5
2007년(B)	37.8	15.8	33.9	9.5	3.1
증감(A-B, %p)	△9.2	1.0	7.8	△1.1	1.4

주) 1순위는 가중치 2, 2순위는 1을 각각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순위임

#### (4)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9.5%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신용보증서 위주대출”(14.9%),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산과 신용보증서 위주의 “담보대출”관행 애로는 여전히 높은 비중(27.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	신 용 보증서 위주대출	예적금 가 입 요 구	높 은 대 출 금 리	적 기 차 입 곤 란	까 다 로 운 대 출심사	어 음 할 인 곤 란	신 용 대 출 곤 란	매출액 위 주 한도사정
2008년(A)	12.4	14.9	8.4	29.5	4.7	10.4	1.9	10.4	7.4
2007년(B)	14.9	15.7	7.5	33.6	4.0	7.6	0.2	8.3	8.4
증감(A-B, %p)	△2.5	△0.8	0.9	△4.1	0.7	2.8	1.7	2.1	△1.0

주) 1순위는 가중치 2, 2순위는 1을 각각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순위임

#### (5)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중점추진 금융시책으로 중소기업은 “금리인하”(43.1%)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신용대출 확대(17.7%), 신용보증 지원(17.4%), 설비자금지원(11.3%)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25>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단위 : %)

구 분	금 리 인 하	신용보증 지 원	신용대출 확 대	어음할인 원 활 화	설비자금 지 원	기술개발 지 원	창업지원 확 대	직접금융 활 성 화	수출입금융 활 성 화
2008년(A)	43.1	17.4	17.7	1.4	11.3	4.8	0.3	1.8	2.1
2007년(B)	47.0	14.5	16.8	1.2	13.6	4.3	0.3	0.9	1.3
증감(A-B, %p)	△3.9	2.9	0.9	0.2	△2.3	0.5	0.0	0.9	0.8

주) 1순위는 가중치 2, 2순위는 1을 각각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순위임

## 2) 신용보증 기관 이용현황

### (1) 신용보증서 발급 사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에 대해 “곤란”(26.6%)이 “원활”(26.1%)보다 0.5%p 정도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에 비해 보증서 발급 “원활”은 감소(4.8%p)하고, “곤란”하다는 업체가 늘어(7.6%p) 대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조사결과이다.

<표 3-26> 신용보증서 발급사정

(단위 : %)

구 분	매우 원활	다소 원활	보 통	다소 곤란	매우 곤란
2008년(A)	5.9	20.2	47.4	14.3	12.3
2007년(B)	6.8	24.1	50.2	13.5	5.5
증감(A-B, %p)	△0.9	△3.9	△2.8	0.8	6.8

### (2) 부분보증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은 “신용으로 대출” 42.8%, “추가담보 요구” 23.5%, “예·적금 가입요구” 2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예·적금 가입요구, 추가 담보요구, 기존 대출한도 축소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7> 부분보증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단위 : %)

구 분	신용대출	추가 담보요구	예·적금 가입요구	기존대출 한도축소
2008년(A)	42.8	23.5	22.6	11.1
2007년(B)	54.0	19.8	16.1	10.1
증감(A-B, %p)	△11.2	3.7	6.5	1.0

주) 1순위는 가중치 2, 2순위는 1을 각각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순위임

### (3)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

신용보증기관의 바람직한 보증지원 방향에 대해 매출액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인 운영(32.9%), 연대보증 개선·폐지(18.5%)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3-28>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

(단위 : %)

구 분	매출액기준 보증한도 탄력운영	연대보증 개선·폐지	비재무적 심사요인 비중확대	보 증 료 대폭인하	보 증 건 제한요건 최 소 화	심사절차 최 소 화	신용불량자 제재강화
2008년(A)	32.9	18.5	17.5	12.7	9.7	7.8	0.9
2007년(B)	26.7	22.6	16.8	19.3	6.0	7.1	1.5
증감(A-B, %p)	6.2	△4.1	0.7	△6.6	3.7	0.7	△0.6

주) 1순위는 가중치 2, 2순위는 1을 각각 부여하여 산출한 종합 순위임

## 제3절 대전지역의 산업지원자금 운용실태

### 1.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은 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②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③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원 ④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지식기반경제시대,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투자조합 설치 확대,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엔젤투자시장의 활성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 확대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창업자 양성, 대학연구소의 창업 및 기술보육기능 강화,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기능 강화 등 창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 ②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중소기업이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대,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개발기술의 거래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기술지도,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③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 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 등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공급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④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식정보화시대 및 e-비즈니스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보 공급망 확충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능력 제고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정비,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SMEs Policy Information: SPi) 제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인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정책

의 수립과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총 11개)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판로·인력·기술·창업 및 벤처지원업무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총 50개소)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시책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기관, KOTRA, 한국은행, 중소기업 전담은행 등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 2. 산업지원자금의 내용과 실태

### 1) 산업지원자금의 내용

대전광역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창업 활성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금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및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 자금은 지원조건에 따라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 보험 및 신용보증 등



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별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창업, 설비·원자재 구입, 공장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자금인데, 여기에는 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위탁한 자금(정부위탁 융자금)이 있다. 이들 자금간의 차이점은 정부위탁 융자금의 경우 은행 자체자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융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자금이다.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 및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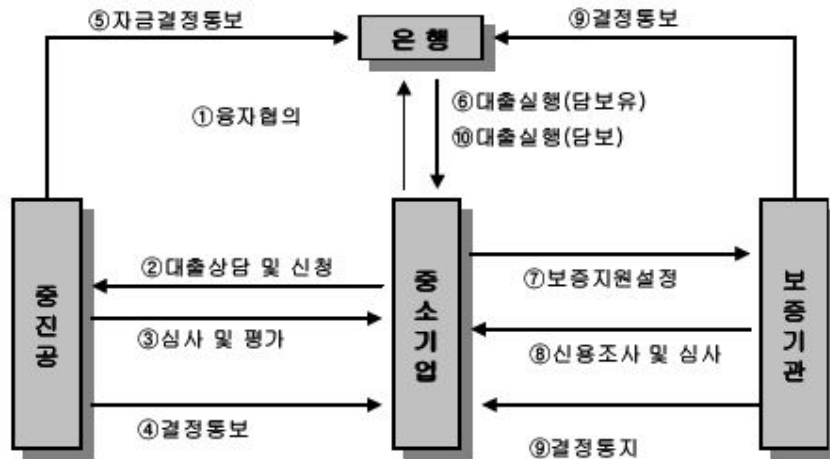
셋째,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구조조정회사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금을 받는 대신에 회사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형태(유상증자)이다. 이들 투자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금(펀드)을 조성하는데, 자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보험방식의 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거래기업이 부도·폐업 등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과거 거래과정에서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이 거의 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경우 부금납부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을 견질 담보로 부도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방식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담보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부분의 자금 융자지원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력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금은 창업초기이거나 소규모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업자금 지원은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제조업은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1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이행보증, 수출보험 등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지원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주) ① ~ ⑥ - 담보제공 가능업체  
 ⑦ ~ ⑩ - 담보제공 불가능업체

[그림 3-2] 산업자금 지원 신청 절차

## 2) 산업지원자금 지원 실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간접 지원제도와 직접 지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지원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증에 의해 저리의 금융기관 용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직접 지원제도는 기업에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자금 용자지원 방식의 기업지원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와 같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3개(중소기업청 8개, 기타 기관 5개)와 대전시에서 3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등 총 18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9>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구 분	사업목적								합계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정보화	벤처	기타	
중기청	8	33	9	10	11	5	14	6	96
기 타	5	12	17	9	19	3	0	4	69
중기센터	3	2	0	3	3	1	6	2	20
특구본부	0	5	1	2	3	0	3	1	15
테크노파크	0	10	0	1	1	0	2	0	14
합계	16	62	27	25	37	9	25	13	214

<표 3-30> 기관별 자금 용자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	중소기업청 (8)	중소벤처 창업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기금
		경영혁신 자금
		구조조정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기타 (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대전시 (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 3. 성장단계별 산업자금 지원 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 결과, 다음의 <표 3-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창업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19개,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8개,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9개 등 특정 성장단계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제도가 총 36개(16.8%)인 반면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총 214개 지원제도 중 178개(83.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니즈 혹은 경영애로 사항이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표 3-3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구 분	성장단계				합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제한없음	
중기청	13	7	6	70	96
기 타	1	0	3	65	69
중기센터	3	0	0	17	20
특구본부	2	0	0	13	15
테크노파크	0	1	0	13	14
합계	19	8	9	178	214

### 1) 창업기

창업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 창업자금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4개(중소기업청 13개, 기타 기관 1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2>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 창업자금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2) 성장기

성장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사업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 3) 성숙기

다음으로 성숙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5개(중소기업청 2개, 기타 기관 3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시에서는 별다른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는 주로 성숙기 기업의 생산 효율화 및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제도이며, 기타 기관에서는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관련 지원제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중소기업청	구조조정 자금
		사업전환 지원자금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지원

#### 4) 제한없음

기업의 성장단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의 유형으로는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9개(중소기업청 3개, 기타 기관 16개), 대전광역시에서 6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2개) 등 총 2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경영혁신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기 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서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신규업종지출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교대체 전환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수출금융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수출보험공사)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한국무역협회)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수출보험공사)
대전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대덕 밸리 투자조합(지원)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특구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해외자금유치지원사업

## 제4절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 운용 현황

### 1. 부문별 지원현황

부문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28.4%(1,046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지원기업 14.8%(546억원), 신용대출자금 지원기업 13.0%(479억원), 창업중소기업 11.9%(439억원),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기여 기업 10.7%(39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소재하는 등 우리본부 관할 지역의 R&D 입지여건이 양호한 데 기인한다.

부문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전년말대비 26.2%(66억원), 중소기업 지원기관 추천기업이 24.6%(16억원),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17.9%(83억원) 증가한 반면, 서해안 원유유출관련 특별지원자금은 전액 상환되었으며, 산·학·연 참여기업이 47.4%(9억원), 농어업자금이 27.9%(12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된 대출액에 비해 금년 들어 신규 취급한 규모가 큰 데 기인한다.



<표 3-36> 부문별 지원현황

(건, 억원, %)

부문별		2008.6말		2008.12말(A)		2009.6말(B)		증감(B-A)	
		건수	배정액 (구성비)	건수	배정액 (구성비)	건수	배정액 (구성비)	증감 액	증감 률
우 선 지 원 한 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553	1,015 (27.6)	638	1,066 (29.0)	618	1,046 (28.4)	-20	-1.9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89	367 (10.0)	279	463 (12.6)	294	546 (14.8)	83	17.9
	창업중소기업	477	461 (12.5)	490	440 (12.0)	538	439 (11.9)	-1	-0.2
	벤처기업	218	312 ( 8.5)	216	252 ( 6.8)	225	318 ( 8.6)	66	26.2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	19	42 ( 1.1)	19	34 ( 0.9)	12	25 ( 0.7)	-9	-26.5
	신용대출자금 지원기업	265	588 (16.0)	282	513 (13.9)	225	479 (13.0)	-34	-6.6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 기여기업	307	407 (11.1)	325	400 (10.9)	280	394 (10.7)	-6	-1.5
	산·학·연 참여기업	6	21 ( 0.6)	7	19 ( 0.5)	3	10 ( 0.3)	-9	-47.4
	중소기업지원기관 추천기업	16	45 ( 1.2)	26	65 ( 1.8)	31	81 ( 2.2)	16	24.6
	환경친화기업	5	12 ( 0.3)	5	10 ( 0.3)	4	10 ( 0.3)	0	0.0
	소재부품 생산기업	4	17 ( 0.5)	5	15 ( 0.4)	5	11 ( 0.3)	-4	-26.7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 단지 입주기업	2	10 ( 0.3)	3	9 ( 0.2)	1	7 ( 0.2)	-2	-22.2
	수도권 이전기업	1	1 ( 0.0)	1	1 ( 0.0)	1	1 ( 0.0)	0	0.0
비 연 계 지 원 금	설 자금	184	170 ( 4.6)	160	153 ( 4.2)	128	134 ( 3.6)	-19	-12.4
	추석 자금	143	142 ( 3.9)	208	191 ( 5.2)	163	148 ( 4.0)	-43	-22.5
	서해안원유유출자금	0	0 ( 0.0)	0	6 ( 0.2)	0	0 ( 0.0)	-6	-100.0
	농어업자금 *	360	70 ( 1.9)	188	43 ( 1.2)	107	31 ( 0.8)	-12	-27.9
합 계		2,749	3,680 (100)	2,852	3,680 (100)	2,635	3,680 (100)		

## 2. 업종별 지원현황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0.8%(2,97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제조업과 농림어업은 16.8%(617억원)와 2.4%(90억원)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제조업 중 조립금속기계가 40.5%, 화학제품이 1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7> 업종별 지원현황

(건, 억원, %)

업종	2008.6말			2008.12말(A)			2009.6말(B)			증감(B-A)		
	건수	배정액		건수	배정액		건수	배정액		건수	배정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농림어업	412	174	4.7	228	107	2.9	145	90	2.4	-83	-17	-15.9
제조	1,754	2,863	77.8	1,987	2,866	77.9	1,876	2,973	80.8	-111	107	3.7
음식료품	239	360	9.8	273	337	9.2	250	370	10.1	-23	33	9.8
섬유제품	42	60	1.6	39	43	1.2	30	37	1.0	-9	-6	-14.0
종이제품	46	40	1.1	54	64	1.7	52	59	1.6	-2	-5	-7.8
화학제품	289	531	14.4	324	508	13.8	327	524	14.2	3	16	3.1
비금속광물	75	150	4.1	101	185	5.0	84	156	4.2	-17	-29	-15.7
제1차금속	65	145	3.9	58	121	3.3	48	102	2.8	-10	-19	-15.7
조립금속기계	903	1,433	38.9	1,017	1,434	39.0	949	1,492	40.5	-68	58	4.0
기타	95	144	3.9	121	174	4.7	136	233	6.3	15	59	33.9
비제조	583	643	17.5	640	707	19.2	614	617	16.8	-26	-90	-12.7
건설업	120	143	3.9	116	149	4.0	105	129	3.5	-11	-20	-13.4
도소매	247	224	6.1	322	288	7.8	363	297	8.1	41	9	3.1
기타	216	276	7.5	202	270	7.3	146	191	5.2	-56	-79	-29.3
계	2,749	3,680	100.0	2,855	3,680	100.0	2,635	3,680	100.0	-220	0	0.0

업종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3.7%(107억원)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2.7%(90억원)와 15.9%(17억원) 감소하였으며,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은 기업은행의 창업중소기업 자금을 중심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어업은 농어업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신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 4 장

---

###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

제1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제2절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제4절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

## 제 4 장 지역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 제1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 1.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평가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며, 이에 지역 중심적인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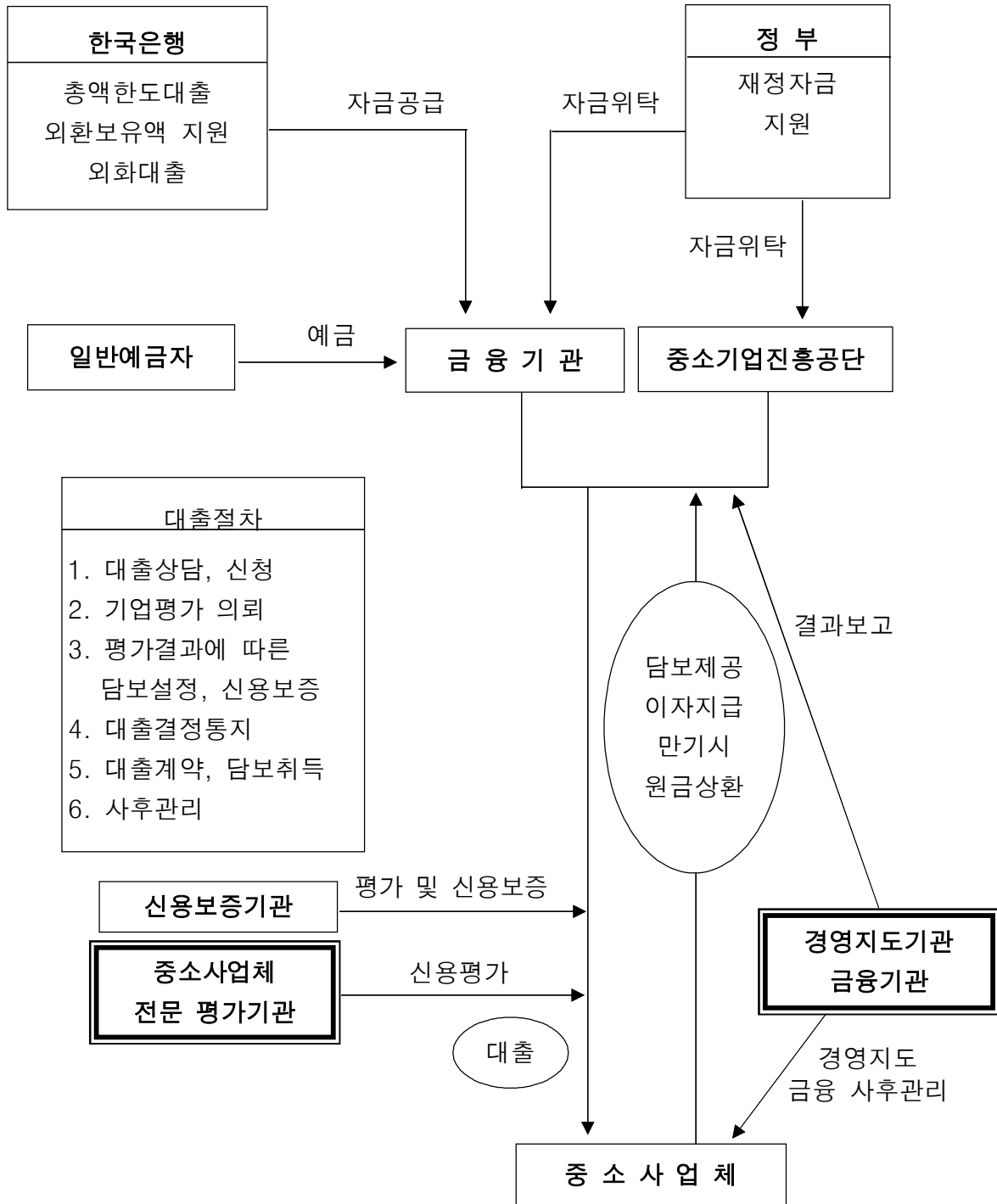
중소기업체 전문가들로 인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신용평가, 경영지도, 경영진단, 정책건의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정책자금과 금융자금 지원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그림 4-1]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들 평가기관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중소기업 평가문제를 해결해주어 금융기관의 금융코스트를 감소시키고, 신용대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체 전문 평가기관의 설립은 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체의 지원제도를 보유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토록 하고, 회사의 성격은 순수 민간기업으로 설립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신용평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정보보유의 각종 신용정보를 제공, 대출 취급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기관이 담보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신용대출제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4-1]중소사업체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신용평가에 의해 대출지원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지도와 함께 지속적인 신용상태의 점검과 감시를 통해 대출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으로써 대출기관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용평가의 수혜자인 중소기업체와 대출기관이 각각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 2. 경영활동지원 강화

### 1) 「(가칭)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자금난은 판매 등 경영실적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뿐 만 아니라 경영활성화를 위한 판매 등 경영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경영자문,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은 상공회의소 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노력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판매매장의 확대 유도,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설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과 같은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판로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지역 중소기업 금융컨설팅팀」 운영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 금융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금융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중

소기업의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나 금융기관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 금융컨설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컨설팅팀에서는 단순히 자금조달 부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IR활동, 신용평가대출 항목 상시체크, 리스크관리, 경영개선 방안제시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폭 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지역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지원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주요 애로요인 중의 하나는 불투명한 회계정보로 인해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의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회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시스템 구입비용, 회계사에 의한 회계장부 기장대리비용, 회계시스템 개선 컨설팅비용 등에 대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거나 지방세와 연계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지원 쿠폰(coupon)제도와 연계하여 부산광역시의 차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 경영지원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이 경영지원 쿠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중소기업 대응 금융역할 강화

### 1. 중소기업금융 역할 강화

지역금융시스템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중소기업 금융이며, 지방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과 대기업 우선의 산업정책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지방경제의 한 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이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보력의 부족과 불충분한 신용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BIS비율 준수 등의 이유로 신용정보가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 금융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 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은행의 이러한 운용방식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은행의 퇴출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금융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림 4-2]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의 비대칭(mismatch)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림에서 가는 실선은 종래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굵은 실선은 외환 위기 이후 드러나고 있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굵은 실선은 외환 위기 이후 드러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변화 현상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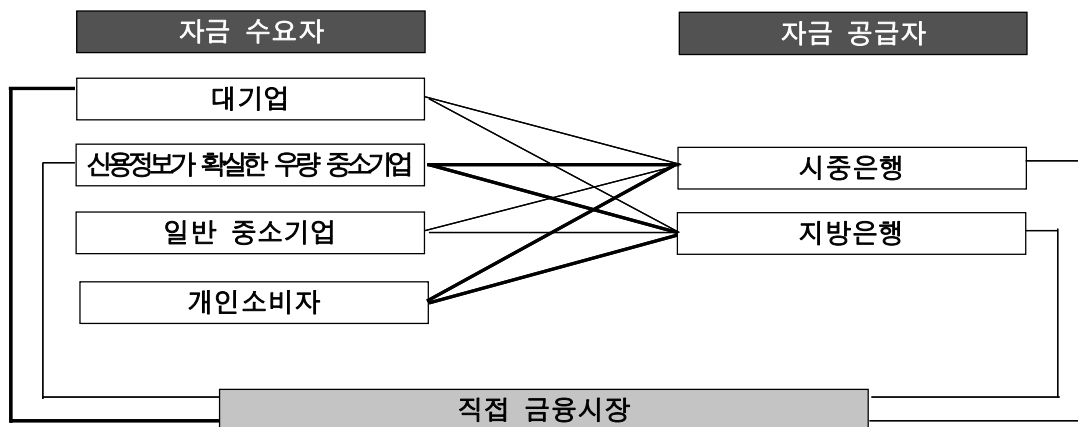
우선 대기업의 경우 종래의 은행차입에 의존하던 것을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신용정보가 확실한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시중·지방은행을 통해서 차입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서민형 금융기관을 위시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을 크게 늘

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2]를 통해 분명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시장에서 신용 정보가 불확실한 일반 중소기업만이 유일하게 굵은 실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금융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기타 서민형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대기업과 신용정보가 확실한 우량 중소기업은 직접 금융시장과 시중·지방은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일반 중소기업은 자금 흐름의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된 채 방치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금융을 어떤 은행이 전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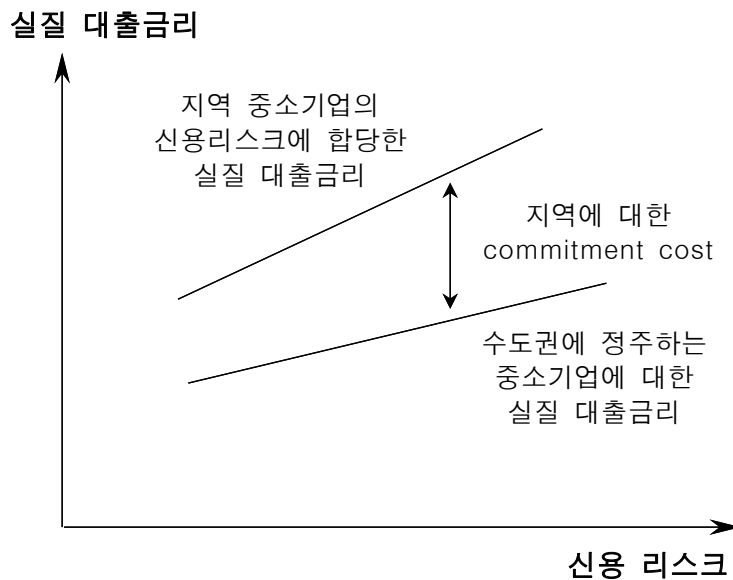


[그림 4-2]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의 비대칭 현상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그림 4-2]에서 나타나고 있는 헌신비용의 분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을 높여 이를 통해 정주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공동체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공급선도 기능이 복원되어 금융과 실물경제의 밀착도가 제고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전망(time horizon)에 의해 지역금융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림 4-3]에서 나타난 현신비용이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분담되고 또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금융시스템을 위한 논의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신용정보가 확실한 우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방은행이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지역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4-3]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중소기업 금융은 지역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가 구현되는 가운데 자금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시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2. 금융의 지역 중점산업 육성 역할 강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내지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소득분배의 불균형 시정 및 지역의 고용기회 확보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 공급 및 지역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지역경제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지원을 통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발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용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내용상 중복이 없도록 산업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며, 지원 내용도 산업 규모별로 차등하여 자금 배분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창업 및 금융지원 강화

지방화시대에 지역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업체, 업종의 장래 성장전망을 고려하면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신용대출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금융지원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신규창업의 단계에서부터 지원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통한 고객 Main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2) 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업체에 대한 컨설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 의한 경영지도와 각종 민간단체나 연구소, 기업 등 민간기업에 의한 컨설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자주적 경영능력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출 등 자금지원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의 효율화 및 중소기업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촉진과 수수료 수입증대 등을 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3. 지역산업에 대한 경기조절 기능 강화

지역금융이 지역산업의 경기조절 기능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수단을 통하여 지역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수단 역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업,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은 「과잉 투자→과잉 경쟁→경기 침체→연쇄 부도→금융기관 부실화」의 위험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내 금융기관이 제휴하여 과열 조짐이 있는 업종에 대해 지역 유동성 한도를 정하고 사전 경고 기능을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규 진입의 여지가 있는 성장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유동성 한도를 확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경기와 관련한 미세 통계의 작성 및 공유 역시 중요하다. 경기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기와 관련한 통계를 미세한 수준에서 작성,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내 금융기관간의 경기통계를 공유하여 과열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사전에 스크린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축소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의 차원에서 지역내 금융기관간의 신용창출 실적통계를 공유하여 업종별 유동성 총액한도를 설정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은 물론 외부 금융기관의 지역내 지점간의 협력과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실적통계를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라 하겠다.

#### 4.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전략 도입

##### 1) 중소기업의 니즈 다변화에 따른 비은행의 시장 참여 확대

중소기업 금융은 미국에서 그 동안 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한도 제공, 현금 관리 서비스 및 모기지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리스, 연금 플랜, 장기투자, 구매카드, 보험, 회계 및 세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이 크게 확대되었고, 시장에서의 점유비중 및 이익창출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립 초기단계에는 주로 설비리스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현금관리 수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업원 관련 서비스의 니즈가 커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한 자문서비스 니즈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 기술력 부족,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개발이 중단된 기술개발 과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이 보류되고 있는 기술과제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금융은 기술개발이 갖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1) 담보력 취약으로 중단된 우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자금지원측면에서 담보력이 취약한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부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금융기관의 지원 촉진장치 마련

창업초기의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우수기술 중소기업은 은행을 통해 융자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

창업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용 펀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투자용 펀드상품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자에 대해 차후에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반대급부로서 일정 금액의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 상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기술개발 단계별 기술개발자금 지원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완과 연계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한다. 특히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사전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자금을 한도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표 4-1>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서비스 니즈 변화

성장단계	영업활동 및 특징	금융서비스 니즈
초기단계	·제품개발 ·고객 확보 ·소요자금 확보	·예금 서비스 및 온라인 बैं킹 ·구매카드 서비스 및 신용카드한도 설정 ·보험 및 퇴직연금 ·소유자 개인대출 ·설비리스 및 창업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자금 대출
생존단계	·영업활동 ·현금예측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 조달	·낮은 단계의 현금관리 ·임금서비스 ·종업원 이익 및 퇴직연금 ·기업경영자문 서비스 ·기업대출 및 창업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자금 대출
성공단계	·비용통제 ·기업운영 개선	·중간 단계의 현금관리 ·종업원 이익 확대 ·투자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조달 ·투자자금 조달 ·Wealth Management 서비스 (소유자 및 임원)
성장단계	·자금수요 급증	·사업상속 서비스 ·Wealth Management 서비스 확대
성숙단계	·금융이익의 통제 ·회계 및 재무통제 향상 ·경영과정의 합리화	·높은 수준의 현금관리 ·신탁서비스

자료: Meridien Research Inc.

## 5. 직접금융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

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설립, 운용되고 있지만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규모나 운용목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출자형태의 자금지원을 적극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산업육성펀드', 정보통신 분야 기업 및 바이오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투자펀드', '바이오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은 지자체와 정부, 민간이 매칭펀드 형태로 조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역 및 국가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운용과 위험분산을 위하여 다양한 투자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1) 중소기업 재생펀드 설정

경영부진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재생펀드'의 설립도 필요하다. 지역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먼저 정부에 건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재생펀드의 설립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2) 직접금융시장 환경 개선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

기 위해 직접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공개요건을 갖추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적, 실무적 지원을 통해 공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를 설립·유치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직접금융 관련 업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중소기업 발행회사채에 대한 인수·보증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지자체 역할 증대

### 1. 지역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제 구축

#### 1)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 확대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채인 「(가칭)지방중소기업 발전채권」의 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지방채 발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미국 주요 州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이 지방채를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제 해주는 등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재원확충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금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부산발전연구원, 99-100쪽).

#### 2)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체제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체계를 기업의 편의 차원에서 현재 추천기관, 보증기관, 대출실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추천기관과 보증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천기능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 및 보증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을 넘어서는 자

금규모에 대한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계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추천, 보증, 대출실행을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과 연계하여 기업이 거래은행지점에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신청하면, 당해 은행이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추천, 보증,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의 전자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연쇄도산 방지체계 구축

거래기업의 도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산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거래기업의 도산은 당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연쇄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산방지(경영안정) 특별상담실 설치, 경영안정대책 대출제도, 도산관련 특례보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쇄도산을 막고, 도산에 직면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부산발전연구원, 100-101쪽).

도산방지(경영안정) 특별 상담실은 지역중소기업이 경영악화, 부도어음 등에 의해 도산직전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에는 지역경제 및 지역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률가, 세무사, 회계사 등이 도산위험에 직면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도산방지 노력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영안정대책 대출제도는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에 상담한 중소기업 중에서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영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연

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산관련 특례보증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이나 재해 등 경영상의 심각한 변화로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도산방지를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표 4-2> 도산방지 특별상담실의 주요기능(안)

구 분	내 용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파악</li> <li>• 당해 기업 결제어음의 처리방법</li> <li>• 회생가능성 검토 및 회생방안의 검토</li> <li>• 채권은행 등과의 협력 의뢰</li> <li>• 도산방지용 용자관계 추천</li> <li>• 도산관계법령(회사처리, 회사변경 등)에 관한 상담·지도</li> </ul>
지역기업 도산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 가능성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li> <li>•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도산방지회의 개최</li> <li>• 대형도산 발생에 따른 연쇄도산 가능 중소기업 대책회의 개최</li> <li>• 도산정보(월별 도산건수, 기업명, 관련기업, 요인 등)의 입수·분석</li> </ul>

## 2.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 1)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과 과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가계 및 기업대출보다 안정적이고 대출금리가 높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필요한 금융주선이나 자문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권에 새로운 수익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부동산 침

채시 공사 중단에 따른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은행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등 과잉경쟁 양상을 빚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산업, 국민, 외환 등 일부 은행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쟁이 거세지면서 통상 'A+'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 2%를 적용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산금리 수준이 최근에는 1.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선별적인 참여와 함께 이미 결정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부실화 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 금융회사가 사업주에 요청할 수 있는 소구권(Recourse)도 점점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추세이므로, 대출위험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요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금융자산 확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절치 않은 시행에 따라 시행착오가 다수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급자 입장에서 위험 상품으로 인식될 경우 훌륭한 제도로써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피되고 사장되고 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 2) 지역금융기관이 갖는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 자원개발, 유료도로와 같은 SOC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이나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수요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타당성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업은 장기 수익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충분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익 및 자산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타 사업과 명확히 분리·독립되어야 하며, 생산되는 산출물의 시장성과 가치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재무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절 지역산업금융 신용평가 운영방식 개선

### 1. 신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열세에 놓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는 시장 인프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축적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에 수반된 추가적인 신용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도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열악한 지역금융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그 동안 국가주도, 중앙집중형 성장방식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과거유산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단순히 시장원리에 의해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별 기업에 배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지역에 대한 헌신비용은 은행이나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금융시스템의 내부에서 지역 전체가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양호한 시장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지역 내 배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 전체의 공동투자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 1)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 확대제도의 강화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예금은행을 비롯한 비통화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가용자금(credit availability) 규모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대출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재단 등)의 기금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재단 등)의 기금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출연금 확대는 물론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들의 영업규모와 비례해서 참여확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지역 중심은행으로서의 하나은행 지역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떠안고 시와 협력하여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관점에서 우선 용이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산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 정부 등의 출연금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고 있는 금융기관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도 분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정 보증운용배수(10배수 내외)에 미달하여 운용되고 있는 보증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증신상품 개발, 지역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DB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

된 창업기업 보증 확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대출 중심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역금융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 (1) 지역기업 정보센터 설립

이러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및 기업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내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가칭 「지역기업 정보센터」와 같은 것을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에 이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은 더 나아가 기업신용의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지역내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중심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의 조절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 성격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종 경기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지방지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선결될 때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상세한 수준에서 작성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합당한 지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 (2)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 시스템 마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 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회사와 더불어 신용조사, 평가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용평가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한다.

## 2. 신용보증제도 운용상 개선방안

### 1) 중소기업 전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 (1) 전략적 제휴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전담 신용평가기관 설립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 신용평가기관이 있으나 주로 회사채 발행능력이 있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사에서 심사, 평가까지 중소기업의 신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기관을 통해 상호인적교류, 공동조사, 신용정보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을 위시한 지역경제계 전체의 공동투자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공동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 회사의 설립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평가회사는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역기업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하성근, 85-89쪽).

## **(2)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강화**

현재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기관에 아웃소싱 하도록 유도하며, 체계화 되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해 부분보증제도에 대한 은행의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해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2)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

### **(1) 신용보증제도의 수요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대 필요**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책보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였고, 향후 중소기업의 지식경제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가 요구된다.

## (2) 정부출연의 지속적 확대 필요

일반회계기준 정부출연금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53.9%, 일본 80.9%, 대만 80.5%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출연금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정부출연예산의 조기집행에 의한 기금운용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3)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출연저항이 예상되므로 대위변제율 연동 출연제도의 도입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설정하고, 전체 대위변제율 대비 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을 현행 출연율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다음연도 출연요율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연요율 조정의 범위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현행보다 과도하게 출연부담이 급격히 증감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4) 부분보증제도의 비중 증대

부분보증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보증사고에 따른 손실을 축소시키고, 부분보증제도에 대한 은행권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 (5) 보증료율의 차별화 확대

기업신용도, 보증종류, 보증기간, 금액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정책목표에 따른 차등율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실현을 위해 창업, 벤처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율을 적용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을 통한 대출자금의 사용내역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발생 시 정책

대상에 따른 할당제를 도입하고, 특별보증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보증은 일반보증으로의 전환 및 보증료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 3) 신용보증제도 개선·확대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 확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의 확대로 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후지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지역신용평가기관의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금신청업체는 자금배정기관과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에 각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서류 및 대출과정이 중복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대출 실행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배정받은 금액과 보증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우려가 많다.

기업의 자금배정은 상환능력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반면, 신용보증지원은 상환능력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들 금액간의 차이(gap)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보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 한도의 정책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지원기관

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향후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경영지도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현행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을 관행으로 하고 있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초기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기술보증이나 기술담보제도 하에서는 부도 또는 도산시 담보대상 기술력이 기업 채무보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력을 보전할 수 있게 하여줄 새로운 제도의 모색, 즉, 기술력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가치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가치보험이란 기존 기술가치담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도산시 정책적인 보험제도에 의해 기술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한편,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술가치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기술평가제가 확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앞으로 신용보증 기술평가제를 특허출원 기업, 실용신안 등록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자금추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공급을 통해 One-Stop 서비스의 제공 및 기술력



이 우수한 대덕특구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성 있는 기업임에도 창업 초기의 담보·매출액 부족으로 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이 어려운 우수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선 대상업체는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등록기업, 특허등록기업, 국내신기술등록기업(KT, NT, EM, IT, INNO-BIZ 등) 등으로 하고, 기술평가 절차는 【기술평가의뢰 / 시 ⇒ 기술평가후 신용보증발급 / 기술평가센터 ⇒ 자금대출 / 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자금추천 희망기업에 대하여 일정 평가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제 5 장

---

###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

제1절 지역금융 시스템 도입

제2절 지역은행 역할 정립

제3절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제4절 지역금융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

## 제 5 장 지역금융 운영체계 개선

### 제1절 지역금융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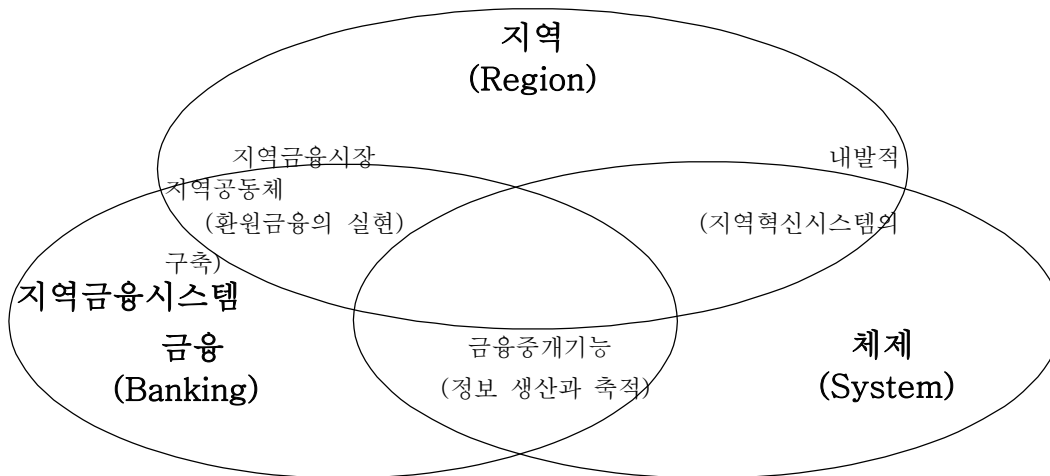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 금융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역은행에 유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은 시중은행과 전국형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세계화는 국가적 범주의 금융시장의 기능을 해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시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네트워크는 이제 지역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순환이 기본적인 금융거래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은행은 금융시장의 틈새를 메우는 부차적 금융기관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네트워크의 다원적 중심을 형성하는 「제1차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역은행의 존립은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금융적 측면에서의 지역화는 지역으로의 자본집적을 통해 구현되며, 이것은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에 수평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금융세계화는 자금순환의 비지적(飛地的) 성격을 심화시키며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중심이 되어 지역금융의 환류기능을 회복시키게 되면 이는 자금순환의 착지적(着地的) 성격의 강화를 의미하게 되고 이를 통한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내적 대응력이 키워진다는 점에서 지역금융과 이에 착근해 있는 지역은행은 연속성을 가지며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림 5-1]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성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금융시장과 내발적 지역공동체(지역혁신시스템) 및 금융중개기능이 상호간에 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금융 시스템은 지역에서 환원금융을 실현시키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며, 또한 정보생산과 축적 기능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금융시스템 개념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IMF 위기 이후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데 한 요인이 된다.

금융산업이 단기적 영업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기관의 개별적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산업 고유의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장에서 단기자본의 이동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자본 운용 방식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만나는 미세혈관적 접촉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장기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장의 관행을 수용하는 노력과 동시에 지역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고유의 금융기능을 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낼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인식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② 한국의 경제구조는 개발연대를 통하여 국가주도, 중앙집중형 방식을 택하였으나, 이러한 경제운용 방식은 수도권 경제 집중과 지방경제 침체라는 극심한 양극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성장 축으로 삼는 지방분권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당위성을 가지며,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③ 지역금융시스템은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내적 안전장치이다. 최근 한국의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으로 급속히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이 추구한 금융구조조정 노력은 외향적 금융세계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면, 향후에 있어서는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완될 때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노력은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급속히 변모해가는 금융환경 질서 속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고 은행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와 함께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제2절 지역은행 역할 정립

### 1. 지방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 성격 기능 강화

- 중소기업체의 주거래은행제도 도입 -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에는 지방 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은 우선적으로 독립 법인격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은행의 설립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금융 구조조정 이후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은행의 퇴출, 시중은행의 소비자 금융의 강화, 은행의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국 규모의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시중은행은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리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공개된 기업정보나 신용상의 공신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장기적 고객관계를 통해서만 그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장기적 고객관계를 통해 확보된 고유의 통제방법과 감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은행은 지역밀착 경영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교 우위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역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지방은행에 대하여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시중 은행보다 높게 설정하여 중소기업 여신을 강조하여 왔으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지방은행과 지역 중소기업간의 타율적인 결속관계 (relationship banking)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한 가운데 파산위험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은행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지역밀착 금융 실현

향후에 있어서 지역 금융기관들은 그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발전해 가는 만큼 지역과 지역주민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서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상호 동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면서도 금리 면에서도 유리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입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지역 대출의 활성화는 지역소재 기업이나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기준의 대폭 완화와 한도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대출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출 세일즈 전략에 있어서도 거래 고객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와 차별화전략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금융이 보다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산업 및 비즈니스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지역금융 수요의 창출과 지역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금융기관들이 수동적인 여신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신창출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사업설명회(로드쇼), 창업설명회, 신기술발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내 유망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검증된 유망 창업자나 기업가에 대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중심적인 은행의 주도로 외국금융기관 혹은 대형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관광,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에 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금융 수요 창출과 지역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을 위해 현재의 수동적인 여신 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여신 창출원을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IMF 이후 지방은행의 퇴출과 함께 지역경기의 침체로 금융기관의 예대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자산 운영상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지역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산업대출 실적과 예대율 면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은행의 설립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볼 때 지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수동적 여신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지역산업 및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중추금융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는 은행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방



은행 혹은 지방은행이 없는 경우 중심적인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한가지는 기 조성된 지역자금의 지역내 환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금융적 유출의 주요 경로를 차단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방은행으로 예치 확대하는 방안, 둘째 투자신탁 및 보험회사의 지역소재기업 회사채 인수 확대와 지방채 인수의무 부과, 셋째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이나 예수금 등의 지방은행 예치, 넷째 연기금, 건강보험료 등의 지방은행 예치 확대와 보험회사의 지방계약자들에 대한 대출 확대, 다섯째 지역에 기반을 둔 증권회사 및 증권거래소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의 경제사정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금융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개발로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산업 자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중심적인 지역은행 가운데 하나인 하나은행 총청사업본부가 향후 자치단체와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제3절 지역금융 서비스의 강화

### 1. 은행 운영체계 개선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활동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며, 지역내 고객 및 경쟁금융기업 등 시장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마케팅 정보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등 영업활동과 섭외, 경영마인드 제고가 수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조직은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역금융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분포, 인구집중 정도 등의 안배를 고려한 지점, 출장소, 무인기계화 점포의 설치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영업전략 체제를 갖추고 영업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영업전략 체제와 마케팅 기능의 부각은 금융기관 조직의 공간배치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지방분권형 광역구조로의 개편 및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금융업무 전반을 취급하는 광역 모점과 기본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역지점 내 위성점포의 확보 등 위성점포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업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모색도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 맞춤형 지역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축적된 신용정보,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금융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상품중심 데이터베이스를 고객중심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개별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를 통합한 고객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한편, 고객의 전반적인 금융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 역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은행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세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밀착적인 금융 서비스의 제공으로 은행권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고위험·고수익 여신의 취급과 관련하여 현재 보다 더 밀착경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수신 및 여신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촌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원리금 납부 방식을 수매기간과 연동하여 적용하는 것도 한 예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수신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 대하여 완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2) 지역금융 서비스의 전문화 및 차별화 시행

최근의 금융환경은 점차 금융기관의 대형화, 글로벌화, 증권화 및 전자화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인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지역금융기관간의 공동유대를 강화하여 보다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특화함으로써 독자적인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확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주민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축적된 신용정보, 지역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위험 고

수익 여신'의 취급과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예금대납 업무 등을 통해 은행권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기존의 상품중심 데이터베이스를 고객중심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개별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를 통합한 고객중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듭 강조하자면 고객의 전반적 금융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금융기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릴레이션십 बैं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1) 지역금융기관의 릴레이션십 बैं킹 중요성

릴레이션십 बैं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선도적인 은행인 하나은행 지역분부를 중심으로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금융기관은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 지역 및 업종에 밀착하여 영업을 전개하는 특징을 가진다.

중소형 지역금융기관들은 점포의 80~90%, 예금조달 및 자금운용의 60~70%를 특정 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 밀착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बैं킹의 기반을 확보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영업은 지역의 고객과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대면(face-to-face) 관계에 기초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릴레이션십 대출이 중요하다.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권역 내의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무제표 등의 정량적인 지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을 통한

비즈니스가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광범한 인적네트워크와 점포망을 통해, 지역 최대의 결제기능을 담당하는데, 지역금융기관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결제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고객기업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경제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릴레이션십 बैं킹의 전개 과정에서 집적하고, 지역정보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하는 한편, 경영상황의 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영지도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한다.

## 2) 중소기업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 마련

지역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신뢰에 기반한 릴레이션십 बैं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3개의 큰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여신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천 개사에 이르는 기업고객과의 거래내용을 조직 및 시스템 차원에서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인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부득이 거래조건을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물론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조직내부에서부터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행동규범과 원칙, 행동규범에 부합하는 교육·연수체제 및 평가체제의 구축, 기업경영컨설팅 조직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현금흐름 및 '리스크 프라이싱'(risk pricing) 위주의 대출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량모형을 활용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

에 업종별·지역별 대출리스크에 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경쟁은행보다도 높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경제·합리성이 높은 영업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소액대출 중심의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과 똑같은 영업방식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영업팀의 운영을 통한 영업생산성의 향상 등 새로운 채널의 확립이 필요하다.

### 3) 지역경제에 대한 릴레이션십 बैं킹 기능 강화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결제기능과 더불어 핵심적인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점하는 중소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차입금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장기적인 릴레이션십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역할은 지역기업과의 지속적인 릴레이션십 관계유지와 지리적인 근접성을 통해 모니터링 비용 등 거래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정보의 효과적인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매우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기업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릴레이션십 बैं킹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수동적으로 기업들의 대출수요에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방식에서 벗어나, 장래 기존산업을 대체하여 핵심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한 업종이나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유망한 지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항상 숙지하고 지역에 있어서 경제·산업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산업전략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공급 등을 통한 총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제4절 지역금융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구기능 확충

### 1. 「지역금융정보센터」 설립 운영

장기적으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대출 중심에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역금융을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및 기업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내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가칭 「지역금융 정보센터」와 같은 것을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 기관은 더 나아가 기업신용의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지역내 우량기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하나은행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의 조절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종 경기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지역본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금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상세한 수준에서 작성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합당한 지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생산적 연구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며, 현행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현재로서도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경제 움직임을 분석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및 통계업무 기능을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지역본부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지역경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활성화 지원실적이 미흡하고 향후 새로운 태도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경제현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세미나·포럼의 개최, 자치단체와의 보다 긴밀하고 상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 각종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 조사자료의 발간 등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배정 증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입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리(연리1.25%)에 운영되는 총액한도대출(10조원 규모)이라고 볼 때, 권역별 배분비율을 보면 타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영남은 전체에서 51.5%(3조1,702억원)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호남은 12.9%(7,967억원), 충청은 9%(5,558억원)만을 배정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이며, 지방은행이 없는 관계로 산업대출, 예대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입장에 있는 지역금융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지역편중 내지 지역소외의 문제는 다중적인 고충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서둘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 두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대전지역 본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 제 6 장

---

## 맺 음 말

## 제6장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지역의 산업금융은 지역금융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역은행의 부재로 인해 자금운용상에 있어서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른바 지역금융시스템 부재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금융시스템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금융이 유기적인 자금의 흐름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메카니즘 하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이와 같은 시스템의 부재는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도시와 비교를 통해 볼 때 산업자금여신 규모와 예대율 비교, 그리고 한국은행의 지역별 총액한도 대출비교에 있어서 크게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개별 금융기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지역금융을 떠안고 있는 각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기관, 금융관련기관 및 산업체가 뚜렷한 문제인식과 목표를 갖고 협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지원금융에 관한 적합적 대응체제로서 지역금융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금융에 있어서의 각 혁신주체들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지역금융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역은행의 존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한국은행, 그리고 특히 현재 지역은행의 일부 기능을 자임하고 있는 하나은행 지역본부의 역할들에 대하여 산업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밀착형의 금융 실현, 지역금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지역금융의 비전은 산업금융지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비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중장기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금융권의 경제적 실익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성장단계의 유수의 벤처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최근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여전히 산업자금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 금융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금융전략, 직접금융지원, 신용보험제도, 릴레이션십 뱅킹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기춘, 「지역금융의 역할」,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vol. NO. 3, 1997
- 강종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 중간금융브리프 14월48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12.12
- 고규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5.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체제 구축 방안」, 2005. 10,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7.4
- 김기욱, 「중소도시육성전략으로서의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토지연구 4호2,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 김병덕, 「금융인력 재교육 및 자격증 제도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16권2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6.4
- 김병연,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 여건의 조성」, 주간금융브리프 17권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 1.28
- 김우영,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삼척대 석사논문, 2004
- 김정식,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나라경제, 2005. 3월호
- 김종선,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지역금융산업의 육성 방안」, 광주대 산업경영연구소, vol.9, 1996
- 김호원,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전략」, 삼척대 석사논문, 2005
- 김효명,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3호, 2004.9
- 대전발전연구원, 「기업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대전발전연구원·대전광역시,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2006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004.12
-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5.6(제44호)
- 손상호, 「금융자율화 시대의 산업지원 금융제도」, 산업연구원
- 정승진, 「지역금융산업의 역할 제고방향」, 국토연구원, 2005
- 조영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97호, 2006. 7.4
- 조욱현, 「효율적인 지역금융정책과 산업입지정책」, 충북개발연구원, 1995
-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8.12
- 이건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14월 2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5.30
- 이덕훈,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이승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2003.12
- 이용기, 「이달의 초점 : 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 :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
- 임경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논문, 2004
- 임성복·조복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충청하나은행 연구용역, 2005.3
- 최장봉, 「금융산업 인력관리의 뉴 패러다임」, 주간금융동향 제13권16호, 한국금융연구원
- 최호상,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SERI 경제포커스 제44호, 2005.6.13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2005.5  
 , 「주간금융브리프」 14권21호, 2005.5.30

- , 「주간금융브리프」 14권48호, 2005.12.12
- , 「주간금융브리프」 16권23호, 2007.6.4
- , 「주간금융브리프」 16권42호, 2007.10.29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 벤처기업과 은행간 관계분석 및 금융활성화 방안」, 2007.1
- , 「대전충남지역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동향과 시사점」, 2007.9
- , 「2007년 대전·충남지역 기업경영분석」, 2008.10
- ,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시사점」, 2009.6
- 한국은행, 「지역금융」, 2009.1
- 한국은행, 「자금순환」, 2008.12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혁신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 2005.7
- 함영훈·이영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 논총』, vol.4, 1998



## 부 록

---

- 
1.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 총액한도 운용현황
  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3. 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관련 주요업무 내용
-

**<부 록 1>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 총액한도 운용현황**

**1. 개 황**

- 2009년 상반기중 우리본부의 총액한도(이하 'C2'라 함) 운용규모는 4,089 억원으로 전년말과 동일
  - o 당행 전체 C2(4조 9,350억원)의 8.3%(점유율 5위)를 차지
  - o C2의 90%(3,680억원)는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우선지원한도), 10%(409억원)는 각 금융기관의 업무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배정(정책호응한도)
  - o C2 대출평잔은 4,037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009. 2. 12부터 1.25%를 적용중

**\* 2009년중 C2금리**

- 1.1-2.8 : 1.75%    · 2.9-2.11 : 1.50%    · 2.12-현재 : 1.25%

- 관내 금융기관의 당행자금 의존율(C2배정액/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액)은 2.3%로 전년말과 동일

**총액한도(C2) 운용현황**

(억원, %)

구 분	2008.6말	2008.12말 (A)	2009.6말 (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대전충남본부 C2 (a)	4,089	4,089	4,089	-	-
우선지원한도(90%)	3,680	3,680	3,680	-	-
정책호응한도(10%)	409	409	409	-	-
당행 전체 C2 (b)	49,100	49,100	49,350	250	0.5

대전충남 비중 (a/b)	8.3	8.3	8.3	-	-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c)	173,781	176,000	179,884 <sup>1)</sup>	3,884	2.2
시설자금	46,022	41,526	49,628	8,102	19.5
운전자금	127,759	134,474	130,257	-4,217	-3.1
당행자금의존율 (a/c)	2.4	2.3	2.3		

주 : 1) 2009. 5월말 현재(잠정)

## 2. 우선지원한도 지원현황

### 1) 개 관

- 2009년 6월말 현재 우선지원한도 지원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은 1조 429억 원으로 전년말 1조 1,390억원 대비 961억원(-8.4%) 감소함에 따라 지원비율이 32.3%에서 35.3%로 3.0%p 증가
  - o 2007년 4/4분기이후 지원비율이 50%이하로 떨어졌으나 2009년 C2 운용기준 개정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
- 지원건수는 2,635건으로 전년말대비 220건(-7.7%)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대출액은 3.96억원으로 전년말보다 0.03억원(-0.8%) 감소
  - o 지원건수 감소는 2009년부터 대전충남경계 타시도소재 중소기업의 대출을 제외한 데 기인

### 우선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이

(억원, %, 건)

구 분	2008.6말	2008.12말(A)	2009.6말(B)	증감(B-A)
한도액 (a)	3,680	3,680	3,680	-
지원대상 대출액(b)	10,036	11,390	10,429	-961
지원비율 (a/b)	36.7	32.3	35.3	3.0
지원건수 (c)	2,749	2,855	2,635	-220
건당 평균대출액(b/c)	3.65	3.99	3.96	-0.03

- 한편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출금에 대한 관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2009년 6월말 현재 연 5.74%로 전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5.40%)보다 0.34%p 높은 수준
- o 이처럼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리우대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비중(22.6%)이 비교적 큰 데 따른 것임

**대출금리 현황**

(% , %p)

구 분	2008.6말	2008.12말(A)	2009.6말(B)	전년말대비 (B-A)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출금 <sup>1)</sup> (a)	6.92	7.86	5.74	-2.12
중소기업대출금 <sup>2)</sup> (b)	7.21	6.91	5.40 <sup>3)</sup>	-1.51
차 이(b-a)	0.29	-0.95	-0.34	

- 주 : 1) 대전충남본부 우선지원한도의 배정대상대출금에 대한 관내 금융기관대출  
가중평균금리  
2) 전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3) 2009. 5월말 현재(잠정)

## <부 록 2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지역본부별 총액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배정된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도배정대상 금융기관)**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대상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조(한도의 구분)**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지역경제여건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지원할 목적으로 선정된 부문이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한도(이하 “우선지원한도”라 한다)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의 90%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한도(이하 “정책호응한도”라 한다)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의 10%

**제4조(우선지원한도의 배정)** ① 본부장은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일반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우선지원한도를 배정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중소기업
  2. 제5조의 특별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 ② 금융기관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우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간 : 1년 이내. 다만,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지원비율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이내

3. 기업별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③ 우선지원한도 미소진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 비중에 따라 배정한다.

1. 제1항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대출 잔액 : 미소진 한도의 50%
2. 제1항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대출 잔액의 6월전 대비 증가액 : 미소진 한도의 50%

④ 금융기관의 우선지원한도 배정 신청 총액이 대전충남본부 총액한도의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 총액 구성비에 따라 배정한다.

**제5조(특별한도의 운용)**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한도의 일부를 특별한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수해, 화재, 지진 등 재해로 인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연쇄부도 등 특별경제현안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3. 명절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운전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등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기업이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우선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별 지원한도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책호응한도의 배정)** 본부장은 <별표 3> “정책호응한도 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호응한도를 배정한다.

**제7조(배정대상외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지역본부별 총액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별표 2>에서 정한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대출금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6.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8조**(보고서 등 제출) 금융기관 결제모점장은 한도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전월말 기준)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 매월 15일까지
2.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매월 15일까지
3. 우선지원한도 지원대출금 회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 매월 15일까지
4. 기타 본부장이 한도배정 등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 별도로 정한 기일까지

**제9조**(제재) 본부장은 제8조에서 정한 보고서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하여 과다 또는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수혜 대출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부당수혜 대출금액의 2배수 이내에서 대출한도 감축

**제10조**(기타사항) ① 본부장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설명, 자금애로 상담 등을 위해 「중소기업금융지원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우선지원한도의 지원을 받은 대출에 대하여 최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6조 제3항 및 제8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지점별 총액한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일반운전자금대출중 어음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일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책협조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5년 5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시설자금 대출실적 평가 기준일은 2005년 7월 말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시설자금 대출실적 평가 기준일은 2005년 7월 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기준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은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금융기관 취급분으로 하며, 동 대출실적에 대한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 기한은 2006년 12월15일 까지로 한다.

② 2006년 12월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한도 배정은 2007년 11월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기준에 의해 취급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은 배정만기일까지 이 기준에 의하여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기준에 의해 취급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은 배정만기일까지 이 기준에 의하여 취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6호)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 획득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 : NEP)인증 획득기업
- \* 기존 NT(신기술인증제도, New Technology), EM(우수품질인증제도, Excellent Machines, Mechanism & Material) 또는 KT(신기술인정 제도, Excellent Korean Technology)마크 등 획득기업이 유효기간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상환기일까지 지원
  
-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 등을 인증 받은 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s.) 등 인증 또는 마크 획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 해당업체의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특허 보유기업 및 현재 사용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장관급이상), 정부산하기관장,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기업

####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기업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참여기업
- 관, 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는 기업

#### 3. 유망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혁신형기업

#### 4.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중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 5. 중소기업지원기관 추천기업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가 추천한 기업  
다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우선지원한도 운용상황, 자금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기업

#### 7.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실적이 현저한 기업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관광숙박업체 등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0%이상을 수출한 기업
-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관광숙박(관광호텔 등)업체
- 최근 3년간 해외박람회(전시)회 또는 해외시장개척단에 2회 이상 참가한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인증한 환위험관리 우수 기업

#### 8. 신규 순수신용대출자금 지원기업

- 금융기관이 신규로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출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신용대출자금(법인대표자 및 최대주주의 인적보증 포함)을 지원한 기

업 중 제조업

**9. 「충청남도 선도기업」**

- 충청남도가 지정한 「충청남도 선도기업」

**10. 환경친화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환경성적표지(EDP :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11. 수도권이전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이전기업으로 이전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12. 지역특화산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별표 4>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략산업 영위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략산업기획단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농업, 임업, 어업, 정보통신산업중 멀티미디어기기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농수축산물 가공업, 타올 제조업, 약초가공품 제조업, 농수축산용 기기 제작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 <별표 5>에서 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

**13.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용단지에 입주하여 생산 가동을 개시한 기업

**14. '중소기업금융지원상담창구'를 통한 상담기업**

-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지원상담창구'를 통한 자금애로 상담기업중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15. 소재·부품 생산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별표 2>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중개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숙박업	551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①관광호텔업 ②수상관광호텔업 ③한국전통호텔업 ④가족호텔업 ⑤휴양콘도미니엄업)은 제외]
주점업	55231 일반유흥주점업 55232 무도유흥주점업 55233 간이주점업
노래방	88913 노래방운영업
무도장	889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88995 도박장운영업
미용업	93112 미용업
안마업	93122 마사지업
부동산관련업	70221 부동산중개업

<별표 3>

정책호응한도 배정기준

1. 신용대출실적(정책호응한도의 **30%**)

- 지방중소기업 대출실적중 신용대출실적\* 구성비에 따라 배정
- \* 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대기업의 수급기업보증, 동업자 상호보증 등 법인 및 개인에 의한 보증은 포함되며, 신용과 담보가 혼합된 대출의 경우 신용부문만 포함)

2.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대출금리(정책호응한도의 **30%**)

- 우선지원부문 대출금의 저금리(가중평균) 순위에 따라 배정
- \* A등급(2개) : 배분율 40%
- B등급(2개) : 배분율 30%
- C등급(3개)** : 배분율 20%
- D등급(3개) : 배분율 10%
- E등급(2개) : 배분율 0%

3. 업무협조도(정책호응한도의 **40%**)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 업무팀, 화폐관리팀이 우리본부 정책수행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업무협조도를 평가하여 부여한 순위에 따라 배정
- 단,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경우 당해월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액이 많은 순으로 순위결정
- \* A등급(2개) : 배분율 40%
- B등급(2개) : 배분율 30%
- C등급(3개)** : 배분율 20%
- D등급(3개) : 배분율 10%
- E등급(2개) : 배분율 0%

\*\* 각 팀별 평가기준은 각 팀이 정함

<별표 4>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략산업\* 업종

구분	업종명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대전광역시	정보통신산업	반도체,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나노반도체	32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바이오산업	바이오 전분야, 정밀화학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첨단부품 및 소재	차세대전지, 신소재, 나노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일반, 지능형로봇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제조업
충청남도	전자·정보기기	첨단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32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첨단운송장비, 미래형자동차 및 부품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첨단문화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	8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농·축산바이오	첨단작물, 첨단축산, 생물, 인삼·약초, 바이오장기, 기능성식품	011 작물제조업 012 축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략산업(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4. 8)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의한 전략산업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략산업기획단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



<별표 5>

농업, 임업, 어업, 멀티미디어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농수축산물 가공업, 타올 제조업, 약초가공품 제조업,  
 농수축산용기기 제작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분류 기준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농업	01	농업
임업	02	임업
어업	05	어업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	3001 321 322 323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농수축산물 가공업	151 15201 153 1544 1545 15492 15493 15494 15495 155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중 민속주 제조업
타올 제조업	17992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중 타올 제조업
약초가공품 제조업	24222	(한의학 조제품 제조업)중 약초가공품 제조업
농수축산용 기기 제작업	28933 2931	(수공구 제조업)중 농수축산용기기 제작업 농업용 기계 제조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511 921	선박 건조업 (기계장비 수리업)중 선박수리업

<별지제1호서식>

## 지방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 보고서

(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_\_\_\_\_은행(회)  
부(점)장 (인)

### 1. 지방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월말잔액(A)	금월말잔액(B)	증 감(B-A)
원화금융 시설자금대출 <sup>1)</sup>			
지방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sup>2)</sup> (C)			
대상외대출    (D)			
부도거래처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sup>3)</sup>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대출 <sup>4)</sup>			
한국은행 자금지원 대출 <sup>5)</sup>			
우선지원한도 대출			
타규정에 의한 대출			
공공기금 등 지원대출 <sup>6)</sup>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중개업 대출 <sup>7)</sup>			
대상대출    (E=C-D)			
신용대출 <sup>8)</sup> (부표 1-1)			

주 : 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B/S계정과목의 원화금융자금 대출금중 “중소기업 시설 자금대출” 금액 (한국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산업시설자금대출” 금액, 농협은 회원조합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제외한 일반시설자금대출 및 농기업시설자금대출 금액)

2) 원화 금융시설자금대출중 대기업대출, 서울소재기업대출 등을 제외한 대출금

3) 최종부도거래처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4)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5) 우리본부의 지역본부별 총액한도가 지원된 대출금 및 타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으

- 로 한국은행의 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이차보전대출은 제외)
  - 7) <별표 2>에서 정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미용업, 안마업 등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대출금
  - 8) 대상 대출금(E)중 신용대출금(수급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증, 동업자 상호보증 등 법인 및 개인에 의한 인적보증 포함)

※ 보고서 제출기한 : 익월 15일



## 2. 지방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월말잔액 (A)	금월말잔액 (B)	증 감 (B-A)
일반운전자금대출 1)			
지방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2) (C)			
대상의 대출 (D)			
부도거래처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3)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대출 4)			
한국은행 자금지원 대출 5)			
우선지원한도			
타규정에 의한 대출			
공공기금 등 지원대출 6)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중개업 대출 7)			
대상대출 (E=C-D)			
신용대출 <sup>8)</sup> (부표 2-1)			

- 주 : 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B/S계정과목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중 “일반자금대출” 금액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대출” 금액, 농협은 “농기업운전자금대출” 금액, 수협은 “금융어업자 금대출” 금액을 포함)
- 2)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중 대기업대출, 서울소재기업대출 등을 제외한 대출금
- 3) 최종부도거래처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농·수협의 경우 농림축산어업인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대출금 포함)
- 4)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 5) 우리 본부의 지역본부별 총액한도가 지원된 대출금 및 타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한국은행의 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이차보전대출은 제외)
- 7) <별표2>에서 정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미용업, 안마업 등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대출금
- 8) 대상 대출금(E)중 신용대출금(수급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증, 동업자 상호보증 등 법인 및 개인에 의한 인적보증 포함)



<별지제2호서식>

**우선지원한도 배정신청서(신규·연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귀하 \_\_\_\_\_은행 \_\_\_\_\_부(점)장 (인)

차주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년 월 일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 생 산 품		전년도 순이익	백만원
	업 종 (KSIC)		종 업 원 수	명
	소 재 지	( ☎ )		
자금지원 내 용	대 출 금	백만원	대출금리	(감면 %p)
	최 초 대 출 일		연장일	만기일
	대 출 과 목			
	취 급 점		담당자(전화)	( )
우선지원 대상 구분				
지원사유				

- 붙 임 : 1. 대출금원장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우선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 신청서 제출기한 : 매월 15일





### <부 록 3 > 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관련 주요 업무 내용

#### 1. 정부 정책자금 연계보증

□ 「청소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연계보증

구 분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구역내의 빈점포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40세 미만)으로 소상공인</li> <li>-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결정을 받은자</li> <li>*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점포지도사업을 활용하여 점포컨설팅 병행 지원</li> </ul>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및 서류접수 : 청년상인 → 시장상인회 경유 → 시장경영지원센터</li> <li>◎ 대상자 선정 : 시장경영지원센터(심사)</li> <li>◎ 보증신청 및 서류송부 : 시장경영지원센터 → 지역신용보증재단</li> <li>◎ 컨설팅지원 : 시장경영지원센터 → 청년상인</li> </ul>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대상자 ◎ 유흥, 사치, 투기업종 영위자
지원규모	125억원 (500개 점포) *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25억원 활용 * 전세보증금 100억원, 운영자금 25억원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25백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2천만원, 운영자금 5백만원)
보증상대처 (적용금리)	→ 보증상대처 : 정책자금 취급 17개 금융기관 ◎ 적용금리 : 3.5% 고정금리 (정책자금 금리)
대상채무	운전자금 - 개별대출
보증기간	5년이내 (1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료율	재단의 보증료율 적용방법에 따름
시행시기	2009. 1. 16 (시장 상인회 접수) ~ 자금소진시까지

□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 연계 보증

구 분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연계보증
대상기업	◎ 폐업후 사업전환 희망자 및 재창업예정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 폐업자 : 1년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지 2년이내(자금신청일기준) 재창업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이상 영업을 계속해 온 자(자금신청일기준)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지원 절차	신청(소상공인지원센터) : 사업전환희망자 및 재창업예정자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신청 ◎ 대상자 선정(소상공인지원센터) :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발급 ◎ 보증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재보증제한대상자
지원규모	1,000억원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000억원 활용)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보증상대처 (적용금리)	→ 보증상대처 : 정책자금 취급 17개 금융기관 → 적용금리 : 정책자금 금리 4.74%, 분기변동금리
대상채무	운전자금 - 개별대출
보증기간	5년이내 (1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 균등분할상환, 30% 만기일시상환
보증료율	재단의 보증료율 적용방법에 따름
시행시기	2009. 1. 20 (소상공인지원센터 접수) ~ 자금소진시까지

## 2. 특례보증

###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구 분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의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내(특례보증은 1차 포함 2천만원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li> <li>- 1천만원 초과 : 보증신청접수일 현재 개업일로부터 6개월 경과</li> <li>- 1천만원 이하 :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li> </ul>
지원 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규모	5,000억원
보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li> <li>→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li> <li>→ 본건 보증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li> </ul>
보증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기업당 2천만원 이내</li> <li>* 1차 특례보증 포함 2천만원 이내로서, 재단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li> </ul>
보증상대처 및 적용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취급기관 :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li> <li>→ 적용금리 :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용</li> </ul>
대상채무	운전자금 (신규보증) - 개별보증, 근보증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료율	고정료율 1.0%
시행시기	2008. 11. 28부터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구 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기업	◎ 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개인기업 - 무등록사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6 430 896 474">당 초</th> <th data-bbox="896 430 1295 474">변경 (09.1.22) -중기청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474 896 568">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또는 10등급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없는 자</td> <td data-bbox="896 474 1295 568">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td> </tr> </tbody> </table>	당 초	변경 (09.1.22) -중기청 지침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또는 10등급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없는 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당 초	변경 (09.1.22) -중기청 지침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 또는 10등급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없는 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무등록 * 소상공인 (사업사실확인을 받은 자) * 무등록사업자 : 중기청 고시 (무등록사업자 확인자)						
지원 절차	신청, 서류접수, 보증약정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보증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86 963 612 1008">저신용사업자</th> <th data-bbox="612 963 1295 1008">무등록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6 1008 612 1270">                             - 재보증제한대상자                              - 신보 및 기보 보증거래기업                         </td> <td data-bbox="612 1008 1295 1270">                             - 재보증제한대상자 (재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무등록사업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 무점포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한자                              - 가로정비구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사업자 (09.1.22자 중기청지침으로 삭제)                         </td> </tr> </tbody> </table>	저신용사업자	무등록사업자	- 재보증제한대상자 - 신보 및 기보 보증거래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자 (재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무등록사업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 무점포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한자 - 가로정비구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사업자 (09.1.22자 중기청지침으로 삭제)	
	저신용사업자	무등록사업자				
- 재보증제한대상자 - 신보 및 기보 보증거래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자 (재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무등록사업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 무점포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한자 - 가로정비구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사업자 (09.1.22자 중기청지침으로 삭제)					
지원규모	1,000억원 (대상자별 구분없이 지원)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 저신용자영업자 및 사업자 무등록 점포입주 소상공인 : 5백만원 이내 → 무등록사업자 * : 3백만원 이내 * 본건 특례보증 및 소액희망대출 이외 추가보증 취급금지					
보증상대처	→ 새마을금고 → 농협 및 신협 추가 (09.2.10) - 적용금리 : 새마을금고 7.3%이내, 신협 7.3%이내, 농협 6.8%이내					
대상채무	운전자금 - 개별대출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조건	<b>보증기간</b>	<b>보증료율</b>
	5년 이내	1.0% 고정료율
보증관할	→ 점포보유자 : 사업장소재지 기준 → 기타 무등록사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행시기	2009. 1. 12 ~ 자금소진시까지	

□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구 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기업	◎ 정부가 지정한 시장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상인 (서울지역 제외) - 정부 지정 100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사업자등록 보유자) * 시장상인회의 확인서 발급	
	<b>변경전</b>	<b>변경후 (09.2.4)</b>
	개인기업인 소상공인으로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후 정상영업중이며 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자	개인기업인 소상공인으로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후 정상영업중인 자
지원 절차	→ 지원대상시장 선정 : 전국상인연합회 (100개시장) → 자금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 시장상인(사업자등록보유) → 시장상인회 → 대상자 선정 : 시장상인회 → 보증신청 및 서류송부 : 시장상인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대상자 → 신보 및 기보 보증거래기업 → 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지원규모	100억원 (100개 시장, 시장상인회당 1억원) *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00억원 활용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5백만원 이내	
보증상대처 (적용금리)	→ 보증상대처 : 정책자금 취급 17개 금융기관 → 적 용 금 리 : 4.5% 고정금리(정책자금 금리)	
대상채무	운전자금 - 개별대출	
보증기간	2년 이내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료율	고정료율 1.0%	
시행시기	2009. 1. 20 (지정상인회 접수) ~ 자금소진시까지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08년 이후 계속사업)

구 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 기업 - 5천만원 이하 : 영업실적 5개월이상 - 5천만원 초과 : 영업실적 6개월이상  * (장애인기업)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 규모	08년 300억원 09년 300억원(정부안)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5천만원 이내 (본건포함 재단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단,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1억원 이내
보증상대처	금융기관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료율	고정료율 1.0%
부분보증비율	(2천만원 초과) 90% 부분보증, (2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 한시적으로 적용 (09.12.31까지) (3천만원 초과) 95% 부분보증, (3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시행시기	2008. 7. 1부터

### 3. 금융기관 협약보증

□ 국민은행 자영업자 경영위기 극복 특별자금 협약보증

구 분	국민은행 특별자금 협약보증
대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절차	→ 대출 및 보증신청 : 소기업,소상공인 → 국민은행 창구 → 보증신청 서류송부 : 국민은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재보증제한대상자
지원규모	5,000억원
보증지원한도 (동일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보증상대처 (적용금리)	보증상대처 : 국민은행 ◎ 적용금리 - 3천만원이내(전액보증) : 3개월 CD + 1.8% - 3천만원초과(95% 부분보증) : 3개월 CD + 1.9%
대상채무	운전자금 - 일반자금대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방법	재단의 신용보증규정 등 제규정에 의함
보증료율	1.0% 고정료율
부분보증비율	◎ 3천만원이내 : 100% 전액보증 ◎ 3천만원초과 : 95% 부분보증
시행시기	2009. 1. 22 (국민은행 접수) ~ 한도소진시까지 * 한도소진시 별도 통보예정

기본연구보고서 2009-14

---

##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체계개선 방안

---

발행인 유 병 로  
발행일 2009년 11월30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TEL 042-○-○ FAX 042-○-○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